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8.30 (수) 15: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제발표

발제1. 미국의 전술 핵 배치 왜 필요한가? / 송대성 前세종연구소 소장

발제2. 북핵 위기 진단과 전술핵 재배치 /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

토론자

박정이 예비역 대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목 차 •

주제발표

미국의 전술 핵 배치 왜 필요한가?

송 대 성 (前세종연구소 소장).....07

북핵 위기 진단과 전술핵 재배치

김 태 우 (前통일연구원 원장).....23

토론문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박 정 이 (예비역 대장).....35

전술핵 재배치의 정당성과 한계

유 동 열 (자유민주연구원장).....41

'북핵·미사일'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전략

김 운 회 (동양대 교수).....49

발제 1

미국의 전술 핵 배치
왜 필요한가?

송대성

前세종연구소 소장

미국의 전술 핵 배치 왜 필요한가?

-당위성, 장애요소, 극복방안-

송 대 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전 세종연구소장)

목 차

I. 문제 제기

II. 미국전술핵 한국 배치 당위성

1.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
2. 핵에는 핵: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3. 동맹국 미국에게 다가가고 있는 재앙: 발생지근거리에서 차단
4. 트럼프 행정부 정서
5. 사드 문제 자동 해결: 이슈 선점
6. 북한/중국 목 앞에 비수(匕首)
7. 청사에 남을 선명한 안보 이슈

III. 장애요소와 극복방안

1. 현 한국정부의 인식·대책 오류
2. 미국정부 정서
3. 한국 내 여론
4. 북한/중국 반발
5. 미국-중국 간 빅딜(Big Deal) 진행 (?)

IV. 요약 및 결론

I. 문제 제기

1.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실전 배치국

▲ 핵탄두 완성: 5차례 실험을 통해 완성

① 제3차 핵실험(2013. 2. 12): 98%완성 설

② 제4차 핵실험(2016. 1. 6): 거의 100%

*북한주장: “수소탄 실험 완벽한 성공“ 발표, “소형화된 수소탄”
“핵 보유국→핵 강국”, 정확한 내용 미 파악: 증폭 핵분열 탄(BFD: Boosted Fission Device)

③ 제5차 핵실험 (2016. 9. 9)

-위력: 인공지진 5.04, 폭발력 TNT 10~12kt(히로시마 2/3, 75%), 사상최대
위력, 서울시 투척 시 총1백만 사망

⇒특성: <소형화+경량화+다중화>→<표준화+규격화>, 증폭 형 핵 분열 탄
.발사체와 탄도 : 맞춤형

▲ 발사체 완비: 단, 중, 장거리 다양화 발사실험 성공

김정은 집권 후 37발 실험

① KN-02 (120km, 100발), KN-08 (5,000km, 300발)

② Scud-B(300km, 800~900발), Scud-C(500km, 260발)

-2017. 5. 29 Scud 개량형,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 발사실험(원산)

-2017. 6. 8 금성-2호(추정)지대함 미사일 4발 발사(원산에서 동해),
높이 2km, 사거리 200km

③노동미사일(1,300km, 250발)

-2016. 9. 5 (3발발사시험, 1,300km)

④무수단(BN-25)(3,000~4,000km, 100발, 2016. 4/15(1), 4/28(2), 5.31(1),
6/22(2: 한발은 150km, 공중폭발, 한발은 400km 해상낙하 성공,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 Guam까지 도착 가능), 10/15(1), 10/20(1), 2017. 2/12 무수단 개량 형 발사
 ⑤대포동-1(IRBM, 6,400km, 20발), 대포동-2(ICBM, 13,000km, 2016. 2. 7 궤도진입), 2017. 3. 6 ICBM (?) (1,000km, 4발)

*탄도미사일 실험: 2017년에만 9차례실험

- 2017. 4. 29 (평남북창서 발사, 35km 떨어진 곳에 잔해)
- 2017. 5. 14 05:27 화성-12형 (IRBM: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2111.5km 상승비행+ 787km거리> 비행 (*30~45° 발사 시 5,000km 사정거리, 알래스카까지)¹⁾
- 2017. 5. 21 KN-15 (북극성 -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MRBM)시험발사²⁾
- 2017. 7. 4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고도 2,802km, 사정거리 933km)(*미국국방부, “북한 ICBM은 이전에 보지 못한 신형”)
- 2017. 7. 28 23:41 지대지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성공(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 (최고고도 3724.9km, 추정사정거리 최소 1만km)*미국 동부 타격가능, 대기권 재진입여부 불확실

⑥ SLBM (북극성)2016. 5. 2 SLBM 실험 공중서 폭발(1단과 2단 분리도 안 됨) SLBM(북극성)(2,400km, 2016. 8. 24, 500km 비행, 사실상 성공 2016. 9/3 (2단 미사일+ 고체연료+ 중국 SLBM (JL-1)과 똑 같음)성공, 2016. 12초 육상서 실험 2017. 2. 12 신형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 2,500-3,000km SLBM 개량 형) 2017. 4. 5 북극성2형(KN-15, SLBM을 육상 형으로 개조한 것?) (6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짐, 2,500-3,000km)

*단·중·장거리 미사일 계속 실험, 실전배치 점검

*위싱턴(10,700km), 시카고(10,000km), 샌프란시스코(8,600km), 시애틀 (7,900km), 앵커리지(5,600km), 호놀룰루(7,100km)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실전배치(?): [탄두88cm+ 500kg+ 무수단/노동미사일/SLBM)]

***2016. 10. 8 미국 Rand Corporation**

“북한은 향후 4년 내 핵무기 100개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13~21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 8. 3 일본방위백서**

“북한은 1t 이하 핵탄두를 1만 km 이상 쏠 기술력을 확보했음”

***2017. 8. 8 일본방위백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이미 진전되어있다”

1) 본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평가: 실험발사에 성공, ICBM 실전배치에는 2~3년 걸릴 듯;차량형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운송)+ Erector(설치)+ Launcher(발사))가 아닌 고정발사대일 가능성; 대기권 재진입기술 아직 미흡

2) 본 미사일 실험발사는 560km 치솟고, 500여km 비행한 후, 사거리 3,000km였음. 본 미사일 실험을 “본 미사일은 그 위력이 강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로운 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했음” “본 시험발사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은 미사일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구조체계, 가압체계, 검열 및 발사체계 모든 특성이 완전히 입증되었으며, 새로 개발한 로켓엔진의 신뢰성이 실제비행환경조건에서 재확인 됨”으로 평가 받고 있음.

*김정은, “국가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16. 3. 3.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장에서)

*2016. 9. 23 리용호(북한 외무상) 유엔본부총회 기조연설: <핵무장은 국가노선>
“북한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으로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핵의 질적·양적 강화는 계속될 것이다.” 3)

⇒ “북한, ICBM 탑재 핵탄두 소형화 성공” “북한 핵무기 최소 60개 보유”
(2017. 8. 9 WP, “미국 정보당국 결론”(DIA 2017. 7. 28일자 작성 기밀보고서))

2. 핵무기 잔혹성과 비무장 국의 비참함

▲ 핵무기 위력

핵무기의 가공스러움: 미국 국방성 (2004 Simulation)

[가정]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위 15kt 핵 투하
(2013년 제3차 핵실험 6~7kt, Hecker 7~14kt)
<피해사항>(1) 1.8km 내: 모든 것 증발 (이태원, 삼각지, 반포 등)
(2) 4.5km 내: 휴지조각 (광화문, 여의도)
(3) 40만 즉사, 22만 추가 사망 : 총 125만 사망

▲ 핵보유국과 비핵 국

북한 핵 관리 실패: 핵보유 국 (북한) vs. 핵 미 보유국 (한국)

-북한정권의 실체⁴⁾와 핵무기의 가공스러움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현실
.2017. 6. 9 워비어 사망 “북한정권 잔혹성”

-(1) 생존하려고 하는 경우: 인질/노예
(2) 재래식 무기로 대결을 하면: 가루가 되어 피 빗물 됨

*2017. 8. 8 새벽 2시: “서울 불바다 위협”

3. 북한 비핵화 기대 난망

(1) 북한의 핵보유: 북한정권 3대 올인 사업

3) 북한은 2016. 5. 6 북한 제7차 당대회(36년 만에 개최)를 통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전세계를 향해 선언했음: ‘항구적 핵보유국’ 선언(김정은의 최대 치적으로 선전); “북한을 ‘동방의 핵 대국으로 빛내자!’” (당결정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핵·경제병진노선 계속 추구; ”; “세계비핵화 노력 하겠다”; “핵개발 지속적 노력”; 주한미군철수 주장;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주장; 남북군사회담 제의; 대북 심리전 중단 요구; “서울을 해방하고 미국을 없애겠다”; “명령만 내리면 핵되 터뜨리겠다” 등을 핵보유국으로서 향후에 추구할 계획임을 천명했음.

4)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북한정권의 실체>는 (1) 잔혹한 독재병영국가, (2) 지상지고 국가경영 목표: 선군정치/병진노선, (3) 정권의 행태특성: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Enigmatic Regime), (4) 만고불변 대남정책 목표: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음.

- (2) 지상지고 국가경영철학: 군사제일주의
- (3)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정권 정서
- (4) 비실효적인 북한 비핵화 노력

⇒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1) ‘공포의 테러(Balance of Terror)’

- 한국의 핵보유 (한국 자체 생산/동맹국 핵 지원/ 기타 방법 등)
- *2017. 8. 16 <문화일보+엠브레인> 국민들 여론조사
- 핵무장 찬성 (62.8%), 반대(34.8%)

(2) 재앙 사전 제거

- 북한 핵무기 불능 화
- 북한 핵무기 전문 인력/사용권자 제거
- “북한이 핵공격 능력을 갖게 되면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은 바로 죽는다.”
- (2016. 10. 14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Daniel Russel)
- “북핵문제 해결 첫걸음은 김정은 제거부터” (*미국 Trump 행정부 정서)

⇒ 모든 가능성 다 올려놓고 대한민국 생존 책 모색

II. 미국 전술핵 한국배치 당위성

1.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향후에도 실패가능성 높음

(*북한은 사생결단, 제재는 구멍이 숭숭)

- 북핵문제를 두고 주변국 정세: 3대 3 대결구도(한·미·일 vs. 북·중·러)
- “러시아, 북한과 교역 급증. 중국 못잡은 ‘든든한 이웃’으로 부상(2017. 7. 24)
- “북한, 밀수출·타국수출로 큰 타격 없어” (2017. 7. 11, 영국, Financial Times)
- 북한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망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
- .미국 국가정보국(DNI)장 클래퍼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생각은 가망이 없다”
- (2016. 10. 25)
- 중국의 노골적 북한 핵 보유 비호:
- .시진핑: “중국은 북한과 ‘혈맹(血盟)’이다”
- “북 핵은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 25년 전 한국과 수교했지만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 2018. 7. 6 독일 베를린에서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에서-
-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사실상 불가능을 의미
- UN대북제재결의안 2371호(2017.8.5.): 실효성 기대 난

- (1) 근래 북한-중국 친교관계 가속화, (2) '원유공급 금지' 비 포함,
- (3) 중국: 합의≠실천, (4) "러시아 올해 북한에 원유수출 2배, Putin 김정은 후원자로 나섬"(2017. 7. 24)
- *북 "UN결의 2371 전면 배경, 미국에 천백배로 결산" (2017. 8. 7 북한정부 성명)

2. 핵에는 핵: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 "핵에는 핵" (국제정치학 기본 상식)
 - .영국의 국방정책수립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방위분야 철학자(The philosopher of defense)로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약한 마이클 퀴란(Michael Quinlan)은 "핵무기로 무장한 적대국들끼리는 상대방에 대한 취약한 점을 모색한다든가 상대방을 괴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음.⁵⁾
-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대결하겠다는 것은
 - .2016. 10 4 "육군에 치우친 'Kill Chain' 무기...북한의 이동발사대 못 잡는다"
 - "군, 2020년까지 타격무기도입예산 총 9조원 90%인 8조원을 '地對地탄도·순항미사일에 쏟아 부어..." (《조선일보》)
- Trump, "북한의 나쁜 행동, 혹독하게 조치하겠다." (2017. 7. 5)
 - 유엔 미국 대사: "우리의 군사력은 막강하다. 필요하면 사용할 것이다" (2017. 7. 5)
- 북 핵을 두고 3:3 대결구도 가시화
 - .한미일 "중국역할 하라"
 - .북중러: "선제 대응 하겠다"

3. 동맹국 미국에게 다가가고 있는 재앙: 발생 지근거리에서 차단

- 안보의 제일 수칙: 재앙을 키우지 않고 사전 제거하는 것
 - (*선제공격/예방공격 필요)
 - . "재앙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 .이스라엘 안보전문가(Inn Bar) "재앙을 사전 제거하는 것은 안보에서 가장 근본 중 근본이다"
- 한국에 미국 전술핵 배치는 미국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재앙을 재앙발생 지근거리에서 차단하는 의미: 미국이 더 원할 수 있음
- 미국의 핵은 실용성이 보장되는 완제품
- "북한과 회담보다는 비핵화 요구가 먼저...필요하면 대북군사수단 동원"
 - (2017. 7. 18 미국 가드너 의원 (상원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5) Tanya Ogilvie-White, *On Nuclear Deterrence: The Correspondence of Sir Michael Quinlan*, IISS, 2011, p. 69.

- “북한의 핵위협이 한·일에 더 강력한 무기배치 자극” (2017. 8. 8 NYT)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론 확산” “일본, 북한 선제태격 능력 논란”
- “미국인 74% 북한과 전면전 우려” “북한은 미국의 위협 81% (미국인)”
 (2017. 7. 18 WP·NBC 공동여론조사)

4. 트럼프 행정부 정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 .“북한은 화염(Fire)과 분노(Fury)에 직면할 것” (2017. 8. 8)
- .“빈말이 아니다...북한이 생각 못할 일 생길 것” (2017. 8. 10)
- .“미국은 미국, 미국 부속도서,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면 우리는 공격 한다”
 (2017. 8. 14)

-풀러 미국 Heritage Foundation 이사장

- “북한이 핵위협 계속하면 전술핵 재배치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Option”
 (2017. 8. 16 <조선일보> 강인선 특파원 인터뷰)

-매티스 미국국방장관: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이 준비돼 있다”
 (2017. 8. 19)

-“북한 핵을 억제할 모든 미국자산 한반도에 제공”

- .“북한 핵 해결은 외교가 우선이지만 강력한 군사적 뒷받침이 필요”
- .“김정은이 옳은 선택하기를 바란다”
- .“외교가 출발점. 그러나 외교는 강력한 군사적 노력에 의해 뒷받침 되는게 관건”
 (2017. 8. 22 을지훈련기간 중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군수뇌부 3인방 (해리 해리스
 미국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 새뮤엘 그리브스 미국미사일방
 어청장))

-한국은 지구촌 최강국/최강대군사력 보유국/핵무장 국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유:

- 북 핵 대비 전비강화 노력
- .2017. 5. 30 미국, ICBM요격 첫 시험 성공(사드 15~16번째 실험 성공),
 사드능력 의구심도 해소
- .2017. 8. 2 미국공군 신형 대륙간탄도탄 미사일(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 성공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버라 북서쪽 바데버그 공군기지, 6,700km 태평양상
 마셜군도 좌절린 환초 (목표물) 정확히 명중)

-2017. 8. 22 “북한 억제할 모든 미국 자산 한반도에 제공” (미태평양사령관·전략사령
 관·연합사령관·미사일방어청장, 2017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기간에 참석
 한 미국 핵심군수뇌부 기자회견)

-2016. 10. 5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연구회(CCGA: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미국민들 60%는 북 핵은 미국에 위협이라고 인식, 70%는 주한미군 한국주둔 찬성“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핵무장한 한국을 보게 될 것이다.”
(2017. 4. 11 미국 국무장관 Tillerson)

-미국은 실전에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핵 최대 보유국.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은 100% 실전에 사용 가능한 실전무기

.트럼프: “북한의 나쁜 행동, 혹독하게 조치하겠다” (2017. 7. 5. 북한의 ICBM테스트 (2017. 7. 4)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방이 심각한 안보상 위협을 받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일방을 지원해야만 함”(제2조)

.한국외교의 질에 따라 얼마든지 동맹국의 핵보유능력과 핵전문성을 협조 받을 수 있음

5. 사드문제 자동 해결: 이슈 선점

-‘한국에 미국 전술핵 배치’ 이슈는 ‘한국에 사드 배치’ 이슈보다 그 강도가 훨씬 강하고 심각한 이슈: “도둑을 피하려다가 강도를 만난 꼴”(북한/중국입장)

-중국/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수 백 가지 적극적인 카드 중 하나

6. 북한/중국 목 앞에 비수(匕首)

-한국에 전술핵배치는 북한/중국의 목 앞에 칼을 들어대는 의미

-국가안보의 정석

(1) 중국: 북한 비핵화에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부메랑

(2) 북한: 약소국이 강대국 협박한 자업자득

-조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 몸통 공격”

-국제정치의 생생한 현실주의(Realism)

7. 청사(靑史)에 남을 선명한 안보정책

-<국민들 공감+세계인들 공감> 할 수 있는 선명한 이슈

-대한민국 생존과 직결된 이슈

-이적성문화를 세척할 수 있는 실효적 이슈

-“실효성 없는 대화로 북핵문제 해결 하겠다”는 주장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III. 장애요소와 극복방안

<개요> 동맹국 전술핵 한국 배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비핵국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생존차원에서 제일 화급하게 추진하여야만 할 대책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대한민국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임.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순발력 있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991년 12월 13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발효: 1992. 2. 19)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을 조속하게 한반도에 다시 “환원 배치하는 일”임.

현재 미국은 약 7,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이들 핵무기 중 북한의 핵보유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당수 핵무기들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맹국 한국에 배치하는 것임.

<제1 장애요소> 현 한국정부 인식·대책 오류

[상황]

-북한 실체에 대한 인식오류

- .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이지 우리의 주적이 아님”(*일반적 정서)
- . “대화여건 갖춰지면 대북특사 파견 고려하여볼 수 있어” (2017. 8. 17)
- *북한, “문, 추악한 친미분자” (2017. 7. 11 통일부가 대화 제의하는 날)
- .북한, 인구조사비용 600만불 지원요청...정부 긍정적 검토 (2017. 7. 14)
- *북한 김정은 재외공관에 긴급지령문 하달(2017. 7. 19 일본 아사히신문):
“문재인 집권 때가 절호의 기회...미국과 평화협정을 실현해야만 함...”

-북핵 위협/해법에 대한 인식오류

- . “Kissinger는 그저 나이 먹은 한 늙은이 주장일 뿐” (현 정부 핵심 브레인 주장)

-미국의 능력/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한 인식 오류

- .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주한미군철수 주장과 반미 촛불집회” (*착각)
- .북한노동당 조직지도부가 날리고 있는 온갖 교신들 미국이 다 포착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 모름

-중국에 대한 인식 오류

- . “중국 국력과 미국국력, 중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력을 비슷한 것으로 착각”

-대한민국 생존 책에 대한 인식 오류

-현실 국제정치 실태에 대한 인식 오류

.문대통령 [베를린 평화구상](2017. 7. 6)⁶⁾

.현 정부, “북한에 군사·적십자회담 개최 동시 제의”

(2017. 7. 17)

.남북외교장관 ARF에서 조우: 한국 북한에 대화조급증 전달(2017. 8. 5)

.한국 국방부, 대답 없는 북한에게 “회담 조속호응” 재촉구 (2017. 7. 21)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한반도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 못해. 모든 것 걸고 전쟁만 막겠다”

(2017. 8. 15, 문대통령)

(*전쟁은 동의 얻으면서 하는 행사가 아님. 모든 것을 걸려면 힘과 여건이 되어야 함: 칼집 속에 무서운 칼이 있어야만 대화/외교가 통함; 강대국이 약소국 결재 받고 전쟁하지 않음; 많은 전쟁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정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불가론을 주장함에 대해) “주한미군이 아닌 군사력동원하면 한국동의 없이도 전쟁 가능함”(2017. 8. 22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

[극복 방안]

(1) 당 지도부 정확한 인식 →전 당원 교육 →국민들 공통인식이 되도록 전파

(2) 대한민국 생존 책에 대한 신념적 공통인식 → 당원 →국민

<제2 장애요소> 미국 정부 정서

[상황]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비 호감: “미국 빠진 한국역사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라”

(*일부 미국민들 정서)

-은혜를 모르는 일부 배언망덕(背恩忘德)한 한국인들:

“반미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

(*2017. 8. 15 미대사관 앞에서 부르짖는 반미집회 동영상)

-사드배치 반대 투쟁: “과연 한국은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동맹국인가?”

.미8군사령관: “사드철폐 땀 한국 민 1천만 명 위험 노출” (2017. 7. 11)

-미국 안보수장들(Tillerson + Mattis) WSJ 공동 기고 (2017. 8. 13)

“한국전쟁이후 경험하지 못한 긴장상황이지만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압박’은 계속할 것임”

-“(한국정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불가를 주장하면) 주한미군이 아닌

군사력을 동원하면 한국동의 없이도 타격할 수 있다“(2017. 8. 22 전 주한미군사령관들)

6) 그 핵심내용은 (1) 흡수통일 등 인위적 통일시도 배제와 평화추구, (2) 북한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추진, (4) 북핵 해결을 전제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 (5)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정치·민간 교류 지원 등임

-핵 비확산을 지지하는 미국 정서

-일부 미국 정가/언론: '주한미군철수' 논의

[극복 방안]

- (1) 한미동맹 어제, 오늘, 내일 차원에서 미국정치인들 설득 노력
- (2) 한국 내 "미국전술핵 한국배치 여론" 확산
- (3) 한미 간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배치위원회] 구성·운영
- (4) 야당 대표/의원들 방미: 여론 조성/호소

<제3 장애요소> 한국 내 국내여론

[상황]

-사드 반대 세력들: 전술핵무기 한국배치에 사드배치 반대논리로 반대
-이적성 여론: 반미/안보역량훼손 차원에서 반대

[방안]

- (1) 사드배치로부터 얻은 교훈 최대 활용
.군 장비 전개/ 군부대 이동/ 군사력 증강 등은 필요시 비공개가 원칙
- (2)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북핵문제 해결 시 까지 Extended Deterrence 한국 상존시킴
- (3) 2단계 배치
제1단계: 일본에 전술핵무기 배치 (*동북아에서 북한이 핵위협을 할 경우 사용할 것임을 알림)
제2단계: 일본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이동성 배치'
- (4) 이적성 여론은 안보정책에서 철저히 역이용 함.

<제4 장애요소> 북한/중국 반발

[상황]

-2017. 8. 7 “UN결의 2371⁷⁾ 전면 배경, 미국에 천백배로 결산” (북한 정부성명)

-사드 배치보다 더 강한 반발 예상

-현 정부의 좌고우면(左顧右眄)

[방안]

- (1) 국내 안보정책 결정/실천을 적/준적과 흥정하는 주제가 아님
- (2) 미국 전술핵 한국배치에 대한 책임은 북한/중국이 상당부분 차지: 당당하게 주장
- (3) 북한 비핵화 실천되면 전술핵 불필요
- (4) 더 강한 한미결속

<제5 장애요소> 미국-중국 간 Big Deal 진행 중 (?): Korea Passing

[상황]

-Henry Kissinger 전 미국국무장관 자문: 미국-중국 Big Deal 높은 가능성

.“북한정권 붕괴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문제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중국의 우려를 들기 위해(북한 붕괴 후) 주한미군철수 공약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의 7.28 ICBM Test 후 Rex Tillerson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조언)

.“미국과 중국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담은 공동성명 내라”

.“북한 핵무장은 중국에게도 큰 문제”

.“미국은 어떻게든 대중국 외교로 북핵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북한과 직접대화는 미국의 이득이 적다.”

.“한국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2017. 8. 12)

-배년(Steve Bannon: Former White House Chief Strategist):

“군사적 해법은 없다...중국과 미군철수 문제 Deal 해야만 함.” (2017. 8. 16)

-WP: “미국-북한 평화협정체결도 대안...주한미군이 이슈가 될 것” (2017. 8. 16)

-미국 합참의장 조셉 던퍼드(Joseph Dunford) 訪中

.한국행 기내에서 기자회견

7) UN안보리 결의 2371호의 핵심내용은 (1) 외화획득 차단, (2) 해상봉쇄, (3)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무기 금수, (4) 제재 대상 확대 등임

“우리 모두는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사적 option은 준비하고 있지만 실행할 경우 결과에 유념하고 있다”
 “현재 국무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
 “군 지도자로서 나는 대통령이 외교·경제 압박노력이 실패한 경우 가질 수 있는 군사 option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북한의 오판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맨 먼저 투입될 중국의 북부전구사령부(선양 소재) 찾아가 랴오닝 성으로 이동해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산하 하이청기지 방문: 인민해방군 군사훈련 관람.

-미국 안보수장(매티스, 킬러슨, 2017. 8. 19)들 일제히 Tone Down:

“군사적 대응이 준비돼있다.”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강한 군사적 결과가 있을 것”

[극복방안]

- (1) 공산주의자들은 “협상≠협상내용 실천”임을 명심하고 중국에게 기만 당하지 않도록 노력
- (2) 강력한 한미결속 하에 ‘북한 비핵화’ 실패 시→미국전술핵 한국배치 합의 및 실천

IV. 요약 및 결론

1.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핵무기 실전 배치국이 되어있음
 -현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함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상황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함.
2. 핵무기의 위력을 고려할 시 핵보유국(북한) vs. 핵 미 보유국(한국)의 안보현실은
 - (1) 한국이 생존하려고 하는 경우: 인질/노예
 - (2) 대결하려고 하는 경우: 피 빗물 (재래식 무기 대적 불능)
3.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 (1) 재앙을 사전에 제거하는 의미에서 북한 핵 폐기는 예방전쟁이나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려움
 - (2) 북 핵 보유 및 위협의 주역인 북한 김정은 제거 및 김정은 정권 교체
 - (3)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한국/한미연합방위체제 핵보유·실전배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4. 미국 전술핵 한국 배치의 당위성은
 - (1)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향후에도 실패가능성이 높고
 - (2)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는 핵에는 핵으로 대결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즉, ‘공포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 (3) 동맹국 미국에게 심각하게 다가가고 있는 북 핵이라는 대재앙을 그 발생의 원점에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며

- (4)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서는 한국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에 미국전술핵 배치”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 (5) 현재 한-중, 미-중 간 상당한 갈등의 요소가 되어 있는 사드 한국배치문제는 ‘한국에 전술핵 배치’라는 주제에 밀려 후 순위 혹은 논의 자체의 무의미의 가능성이 높으며
- (6) 한국에 미국 전술핵 배치는 북한/중국의 목 앞에 비수를 들여대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으며
- (7)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 미국 재앙 차단’이라는 의미에서 미국 전술핵 한국배치는 한미동맹의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국가안보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5. 미국 전술핵 한국 배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장애요소들이 있으며, 각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음

- (1) 현 한국정부의 인식·대책의 오류(북한 실체, 북 핵 위협/해법, 미국의 능력/한미동맹의 중요성, 중국실체, 대한민국 생존 책, 현 국제정치 실태 등에 대한)가 미국 전술핵 한국 배치에 장애요소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당 지도부 정확한 인식 →전 당원 교육→국민들 공통인식이 되도록 전파, ② 대한민국 생존 책에 대한 신념적 공통인식 →당원 →국민 등으로 전파확산 해야만 하며

- (2) 한미관계 결속을 약화시키는 미국의 정서는 미국전술핵 한국배치에 대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한미동맹 어제, 오늘, 내일 차원에서 미국정치인들 설득 노력, ② 한국 내 “미국전술핵 한국배치 여론” 확산, ③ 한미 간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배치위원회] 구성·운영, ④ 야당 대표/의원들 방미: 여론 조성/호소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음.

- (3) 미국전술핵 배치에 대해 한국 내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장애요소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사드배치로부터 얻은 교훈 최대 활용, ②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속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포함시키는 방안, ③ 2단계 배치방안으로서 제1단계는 일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제2단계로 일본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이동성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④ 이적성 여론은 안보정책에서 철저히 역이용하면서 이를 극복하여야만 함.

- (4) 북한/중국의 반발은 미국의 전술핵 한국배치에 불문가지의 장애요소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국내 안보정책 결정/실천을 적/준적과 흥정하는 주제가 아님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② 미국 전술핵 한국배치에 대한 책임은 북한/중국에게 있음을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③ 북한 비핵화가 실천되면 미국전술핵 한국배치는 불필요함을 주장하고, ④ 더 강한 한미결속이 해결의 요체임을 이해하고 북한/중국의 반발을 극복해야 함.

- (5) 현재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미국-중국 간 Big Deal 진행은 미국전술핵 한국배치의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미국-중국 간 Big Deal에는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Korea Passing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① 공산주의자들은 “협상≠협상내용 실천”임을 명심하고 중국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② 강력한 한미결속 하에 ‘북한 비핵화’ 실패 시→미국전술 핵 한국배치 즉각 실천할 것임을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실천을 해야만 함.

• 발제 2 •

북핵 위기 진단과
전술핵 재배치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

북핵 위기 진단과 전술핵 재배치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지난 7월 동안 북한은 대륙간탄도탄(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두 번이나 발사했다. 북한은 2016년 동안 도합 24차례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2017년에도 현재까지 12회나 발사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 레드존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제는 “세계 그 어느 지역도 강타할 수 있는 당당한 핵강국이 되었다”는 북한의 선전을 허풍으로만 들어서 안 되는 이유들이 많다. 북한이 핵탄두의 다중화, 경량화, 표준화, 핵탑재 능력, 미사일 엔진, 고체연료, 재진입 기술, 사거리 연장, 정확도 등에 있어 상당한 능력을 축적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상적으로 가장 고립되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한 나라가 세계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이자 미사일 강국 겸 화생무기 강대국이 된 것이며, 세계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이 새로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부상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게임을 중단시킬 처방을 찾지 못한다면, 새로운 게임체인저로서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은 세계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안보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한편, 세계 핵질서의 수호자이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미국은 지금까지 제재, 대화, 군사행동 위협 등을 포함하는 ‘채찍과 당근’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종용해왔으나 중,러의 비협조에 막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북한이 미국의 아시아 군사기지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미 정부는 북한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소빈국(小貧國)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은 현 상황은 남북전쟁 이래 국내에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 매우 당황스러운 경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기조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미국의 한국 배제(Korea passing)를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그리고 미국의 한국 배제가 중국의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를 가속화시키는 변수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보수 성향의 한국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조기 분리, 한반도 평화협정, 핵동결 빅딜 등을 언급한 것을 주목하며,

이들 사안들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한국의 미래를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미증유의 안보실험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주는 안보충격

멀리 보면, 북한이 '핵강국의 길'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할 내폭(implosion) 및 외폭(explosion)의 개연성을 축적하면서 파멸이라는 포화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당장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치킨게임은 평양정권에게 적지 않은 전략적 성과를 가져다 주면서 세계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에 엄청난 안보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세계 차원에서 호전성 및 불예측성과 결합된 북한의 핵게임은 안보리를 무력화시키고 세계 핵질서를 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끝내 북한의 핵보유를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 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에 이어 북한은 NPT 체제를 거부하는 또 하나의 '예외 국가'로 자리매김될 것이며, 국제규범으로서의 NPT 체제의 보편성과 설득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비토권을 통해 치명적인 제재(crippling sanction)를 거부하고 비공식적으로 북한정권의 생존을 돕는 '이중플레이'를 지속함에 따라 안보리의 권능과 구속력은 무력화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이래 채택된 아홉 개의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 북핵은 신냉전 대결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동맹정책을 희석시킴으로써 기존의 안보질서를 변화시키는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collaboration)를 업고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세 대결을 벌이는 현 동북아 신냉전 구도 하에서 중.러는 대미 견제 차원에서 북핵을 사실상 비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에서 보듯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또한, 8월 5일 안보리결의 2371호 통과 직후에 전개된 미북 간의 설전(舌戰)에서 보듯,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벼랑 끝 전략은 미국과 한국을 이간시키는 동맹이완 효과(decoupling effect)를 발휘하면서 핵우산 신뢰성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 중거리탄도탄(IR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등을 앞세우고 미 본토와 미국의 아시아 군사기지들을 위협함에 따라, 미 국민은 "한국을 돕기 위해 미국의 도시들과 전진기지들이 핵공격 위협을 무릅쓰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으며,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중국과의 빅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동맹이완이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 대만, 일본 등에서의 '자위적 핵무장' 주장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그에 앞서 당장 북한에게 다양한 전략적 성공을 가져다주고 있다. 즉, 북한은 세계적인 고립에도 불구하고 중.러의 비호 아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누리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오랜 전략목표인 '한반도로부터의 미국 이탈'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무릅쓸 만큼 무모하지 않다. 미국을 상대로 하는 북한의 벼랑끝 전략은 미국의 여론을 흔들며 동맹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하는 '계산된 광기(狂氣)'이다.

북·러·이란 제재법 서명(17.8.2) / 안보리 결의 2371(17.8.5) 이후

美北 舌戰 Rationality of Irrationality

	<p>“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로 감히 우리들 건드리면 미 본토는 불바다” (8.6)</p>	<p>“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8.8)</p>	
	<p>“화성 12호로 궤 포위사격 작전 검토중. 김정은 동지 결단시 동시 다발적 연발적 실행(8.9)”</p>	<p>“북한정권 종말과 주민 피멸 자초 행동 하지 말라” (8.9)</p>	
	<p>“미국놈들 좀 더 지켜보겠다 (8.15) 미국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p>	<p>“궤 공격하면 후회할 것.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일 일어날 것” “군사적 해법 준비, 작전 완료” (8.11) 맞고 조심할래, 그냥 조심할래?”</p>	
	<p>“한반도 전쟁 재발 불용” (8.15)</p>	<p>“현명한 판단 없었다면 재앙” (8.17)</p>	

한반도 차원에서 북핵은 45배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을 압도하면서 남북관계를 지배하는 비대칭 지렛대(asymmetric leverage)가 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재래군사력에 있어서의 한국군의 질적 우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붕괴시킬뿐 아니라, '한국 겁주기(Korea scaring)'를 통해 한국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여론을 분열시키면서 한국의 정치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천안안 폭침 이듬해 지자체 선거에서 대북 유화론을 표방하는 정당이 전국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국민사이에 북한을 달래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확산된 것이 승리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

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Si vis pacem para bellum)”는 고전적 진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평화는 굴욕을 의미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나 “나약함이 침략을 초래한다 (Weakness invites aggression)”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한국인들의 뇌리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안보실험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추구해온 대전략들이 성과를 거두는 것에 비례하여 한국의 안보는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현재 북한의 ‘한국 겁주기’와 중국의 ‘한국 때리기’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미국의 ‘한국 배제’와 동맹 이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북핵과 관련한 ‘핵심적 피해 당사국’면서도 ‘비핵심적 해결 당사국’이라는 애매한 위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북핵 해결과 국가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국은 손자의 교훈을 유념하여 스스로 지렛대를 배양하여 핵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키워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힘과 지렛대’를 바탕으로 ‘대북 압박’과 ‘대화과 설득’ 노력을 병행하는 3중(three-track) 전략을 견지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7월 북한의 ICBM 실험발사 직후 한국군의 무력시위를 지시함으로써 ‘힘’을 중시하는 자세를 과시했는데, 이는 과거 보수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방미 중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7월 베를린에서 거론한 ‘한반도 평화협정,’ 8.15 광복절 연설에서 언급한 ‘핵동결 방식 북핵 해결’ 등은 실제로 추진된다면 한국의 안보입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사안들이다. 전작권의 분리는 ‘한국군의 자주성 확대 및 국가 자존심 고양’에는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만들 수 있으나,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유린하기가 더 쉬어지는 것으로 믿게 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전작권 분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면전쟁의 억제, 유사시 미군 개입의 확실성, 전쟁시 승리 가능성 등에 있어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라는 것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변수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평화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가운명과 직결되는 변수들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정전협정 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자”는 주장에 환호하기 쉽지만, 평화협정

이후에 북한의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뒤따른다는 사실이나 평화협정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안보의식이 크게 이완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의식하지 않는 편이다. 역사는 대결적 체제를 가진 국가들 간 또는 현상유지가 아닌 공세적인 의도를 가진 나라가 포함된 평화협정은 예외없이 파기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자고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간의 평화협정은 유지되기 어려운 법이다. 제1차 대전을 마감한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나치독일과 소련이 서명했던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 베트남전쟁의 종전을 가져온 1973년 파리평화협정 등이 지속력을 가지지 못했던 과거 역사가 이를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핵동결 빅딜도 한국에게 안전한 방안이 아니다. 북한이 현 상태에서 핵능력을 동결하고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미국과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골칫거리는 해결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감소하고 북한과 비핵 한국 간의 전략적 불균형이 고착될 수 있다. 즉, 핵동결 빅딜은 미국의 한국 배제와 동맹이완을 부추기는 변수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한국 겁주기'와 남북관계 지배 욕구에 시달리고 남북관계는 '지배국(those who rein) 대 피지배국(those who serve)' 관계로 고착될 수 있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핵동결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순진한 희망적 생각(wishful thinking)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유리한 군비를 스스로 해체한 사례는 없으며, 군비통제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때에만 합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두 차례 ICBM 발사 이후 미국의 조야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핵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은 한국안보와 관련한 불길한 현상이다.

요컨대, 한국에게 있어 전작권 조기 분리, 평화협정, 핵동결 빅딜 등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국민의 환호와 열광을 불러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한국 겁주기'와 중국의 '한국 때리기' 그리고 미국의 '한국 배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운명을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는 미증유의 실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적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런 중대 사안들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이들 사안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많은 국민이 전작권 조기 분리, 평화협정, 핵동결 빅딜 등에 반대해온 이유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들의 우려들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미국에 의한 한국 배제가 한국에게 어떤 운명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찰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운명이 결정되었던 1905년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기억해야 하며, 1950년 1월 '에치슨 라인' 이 발표된지 5개월 후에 북한이 6.25 전쟁을 도발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또 한번의 극단적인 한국 배제가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북한이 미국을 한반도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작권 분리와 평화협정을 원해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며, 핵동결 빅딜이 북한이 내심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핵 피로증이 누적되고 국내정치적 입지가 악화되면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적지 않은 한국 국민은 정부가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런 중대사안들을 거론한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잠정적 핵해결 방안으로서의 전술핵 재배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과 미국에게 새로운 발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북핵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 즉 '중국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외교적 부담'이라는 측면과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돕는 '신냉전 구도 하에서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측면 중에서 후자를 더 중시한다. 때문에 향후 안보리가 더 많은 대북결의를 채택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북핵을 비호하는 중.러의 이중플레이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이 게임체인저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전략적 발상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 중.러.북 북방삼각 국가들이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중시한다면, 미국도 언젠가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핵보유는 금하고 있는 현재의 반확산정책에서 탈피해야 할지도 모른다. 즉, 동맹국들의 자위적 핵보유를 용인.조력함으로써 신냉전 구도에서 북.중.러 북방삼각과 한.미.일 남방삼각 간의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시아에서의 미국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위협적인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자위적 핵무장을 논의하기에 앞서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또 하나의 잠정적 방안(*modus vivendi*)이 있다. 즉,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을 재배치 또는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에게 외교적 통첩을 보낼 수 있다. 즉, 중국이 더 이상 북핵을 방치한다면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지형(*strategic contour*)을 중국에 불리하도록 바꿀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게 있어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겪고 있는 각종 안보 딜레마들에 대한 임시적이지만 종합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임시적인 처방인 이유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인 한국에게 있어 전술핵 재배치는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처방이 되는 이유는 전술핵 재반입이 북한의 한국 겁주기, 미국의 한국 배재, 중국의 한국 때리기 등을 예방·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

핵보유국들이 자신의 전술핵을 동맹국에 배치하는 현상은 196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대부분 철수되었고, 현재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 나토(NATO) 회원국에 200개 미만의 미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나토에 대한 핵우산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핵계획단(NPG: Nuclear Planning Group)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주둔국의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공동운용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개별 동맹국들의 자주성을 배려하고 있다.

냉전의 고조와 함께 한국에도 1958년부터 미 전술핵이 배치되었는데, 1960년대 후반에 그 숫자가 900여 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주한미군은 핵무기 운용 사단을 창설하여 전술핵을 155mm 자주포용 핵포탄,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등의 형태로 운용했다. 한국에 배치된 미 전술핵무기는 1991년 전면 철수되었는데, 이는 냉전 종식과 한반도에서의 대화국면 전개라는 두 가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냉전종식으로 인한 신데탕트 시대를 맞고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활동이 불거진 시점이었으나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서명을 앞두고 남북 간 그리고 미북 간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즉, 전술핵 철수는 북한과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였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27일 해외 배치된 전술핵의 본국철수를 선언했고 10월 5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동일한 조치로 화답함으로써 부시-고르바초프 합의가 완성되었다. 이후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핵부재 선언'을 통해 전술핵의 완전 철수를 북한에 통보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재 북핵 문제의 악화로 한미 양국에서 전술핵 재반입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장단점들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안으로서 한국에서도 거론과 함께 찬반 논쟁이 점화되고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한반도 전략적 불균형 개선, 한미동맹 결속과 핵우산 강화, 북한에 의한 전면 재래전쟁 예방, 국지도발 억제, 북한의 한국 겁주기 억제 및 핵그림자 효과 차단, 남북관계 왜곡 방지, 중국의 한국 때리기 억제,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필요성의 소멸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전술핵이 재반입된다면 북한의 일방적 핵보유로 인한 전략적 불균형은 일시에

해소될 것이며, 남북 간에 '공포의 균형(balance of resolution)'이 성립됨으로써 '이성적 판단에 의한 전면전쟁'의 위험성은 소멸될 것이다. 유관 사례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간의 긴밀한 동맹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맹결속의 효과가 커며, 이로서 미국의 한국 배제가 예방되고 미국 핵우산과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신뢰성도 크게 강화시킬 것이다. 당연히, 한국 내에서 자위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찾아들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본토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북 타격수단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평양 건너에 존재하는 전략핵보다는 현장의 전술핵이 더욱 강한 사용 의지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억제(deterrence)란 인식(perception)의 문제이며, 한반도에 있어서 억제는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도록 만드느냐의 문제이다.

전술핵 재반입으로 인해 한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군이 북한의 '한국 겁주기'가 가져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남으로써 핵그림자 효과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무분별한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남북관계가 포식자-피식자(牛狼) 관계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술핵 재반입과 한미동맹의 결속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재평가하게 할 것이며, 한국의 높아진 전략적 위상은 중국의 일방적인 한국 때리기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의 단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그중에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의 단점으로는 핵전쟁 가능성의 증가, 우발적 핵사고의 위험성,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명분의 소멸, 한반도 군비경쟁 가열화, 동북아 전략환경 훼손, 중.러의 무차별적 반발과 한국 때리기의 악화, 중국판 쿠바 미사일위기의 가능성, 국내 찬반논쟁 격화로 인한 반미정서 확산 및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 NPT 위배 논란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논리적 반박이 가능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핵전쟁 가능성을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북한만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북한이 재래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나 북한이 개발한 전술핵무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격당할 확률보다 낮다. 우발적 사태(black swan)로 인한 우발적 핵전쟁이나 비인가 핵발사(unauthorized launch)의 위험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런 위험성보다는 현재의 핵불균형 상태 하에서 한국이 북한의 상시적인 겁주기, 도발 위협, 남북관계 왜곡 등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소멸된다는 주장이나 한반도 군비경쟁이 격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섰고 비핵화 전망도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현재의 일방적 취약성(unilateral vulnerability) 상태를 무한정 수용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군비경쟁 가열화를 우려하는 의견은 일리가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선의(善意)에 의한 핵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북한은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반입으로 자신들의 핵무기가 효용성을 상실하고 경제적 부담만 안겨주는 상태가 될 때 핵포기를 고려할 것이다. 전술핵 재반입이 동북아 전략환경을 해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기존의 전략환경을 훼손하여 불균형을 촉발한 것은 핵무장을 강행한 북한과 이를 방조한 중국이며, 한미 양국의 전술핵 재반입 결정은 그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일 뿐이다. 전술핵 재반입으로 NPT 체제가 훼손된다는 주장은 전술핵의 배치로 주둔국의 자위적 핵무장을 방지하는 것이 NPT 체제의 보존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반론에 의해 상쇄된다.

그럼에도, 국내 찬반논쟁 격화로 인한 국론 분열, 그로 인한 반미정서 확산 및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 중.러의 극심한 반발과 한국 때리기의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경청할 가치가 크다. 방어무기에 불과 한 사드의 배치를 놓고 극심한 찬반 갈등이 벌어질 만큼 분열상이 심한 한국사회라면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국론분열과 반미정서 확산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중.러의 반대도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반입이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 결속과 한국의 전략적 지위 고양을 가져와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이후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에 준하는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적 인식과 전략적 재발상이 필요한 시기

종합컨대, 한국이 처한 안보현실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전술핵 재반입으로 인해 잃는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술핵 재반입은 무수한 장단점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복잡한 반론과 재반론이 가능한 사안이며, 한국이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동의한다는 보장도 없다. 때문에 전술핵 재반입에 대한 찬반 주장은 장단점들을 냉정하게 비교하는 정교성과 신중성을 수반해야 하며, 어느 한 방향으로의 일방적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저급한 주장'에 그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한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유념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한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이 한미 양국이 전술핵 재반입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적기(適期)라는 사실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실제로 재배치하는 것과는 다른 핵외교의 문제이며, 한미 양국은 이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일단, 전술핵 재반입 논의 그 자체는 북한의 일방적 핵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이자 핵포기를 종용하는 강력한 압박이며, 중국에게는 북핵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외교카드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나 정당들이 정부에게 그렇게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술핵 재배치가 가져올 득실(得失)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논의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 자체를 놓고 한국사회가 분열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이 이 수준의 핵외교 공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 진단 위에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시도해야 한다. 미국은 개별 국가들의 핵보유 금지를 통한 핵확산 방지라는 기존의 정책들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세력균형이라는 더 중대한 전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젠가는 동맹국들의 핵무장도 허용할 수 있다는 '플랜 B'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에 앞선 '플랜 A'로 북핵을 만류하기 위해 전술핵의 재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게도 지금은 전작권 환수, 평화협정, 핵동결 빅딜 등 국민적 논의도 검증도 거치지 않은 안보실험을 시도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북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최대 당면 안보과제이며 한미동맹의 결속이 북한의 한국 겁주기, 미국의 한국 배제, 중국의 한국 때리기 등을 불식시키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현실적 인식 하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통해 한미 핵외교 공조를 모색한다는 새로운 발상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동안 특정 단체들이 한미동맹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무계산적으로 반핵이나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치열한 국익계산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영논리나 이념논리에 함몰된 획일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탈원전 주장에는 원자력이 의미하는 안보적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충정어린 반론이 허용되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재배치가 완벽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앞서 진행될 재배치 논의만으로도 훌륭한 핵외교 카드가 된다는 사실을 수용할 공간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주장들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시기이다. 지금은 한미 양국에게 현실적 인식과 치열한 국익계산 그리고 전략적 재발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끝)

• 토론 1 •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박 정 이
예비역 대장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예비역 육군대장 박정이

1. 들어가며

-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미국의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론이 거론
-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까지 쏘아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맞서 힘의 균형을 이룬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 의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가 이슈화

2. 북핵 미사일 위협 및 비핵화

가. 위협 고도화

- 1990년대 핵위기 이후 수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 제4차 및 제5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 및 표준화를 달성 추정
-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의 우주발사체 및 2017년 7월 화성 14호 ICBM 시험발사, 2015년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사출실험을 실시하여 전략 무기화
- * 북한은 2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2016 SIPRI 10개 보유), 수년내 1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

나. 비핵화 노력의 결과

- 양자 및 다자회담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
 - 제1차 핵위기(미·북회담/ 제네바 합의 체결, 1994.10.21)
 - 제2차 핵위기(미·북·중 3자회담, 2003.4.23~25/1회,
한·미·일·북·중·러 6자회담 2003.8~2008.12/ 6회)
- 대북 제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8차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 * 북한 경제의 열악·폐쇄성, 중국의 미온적 동참 의지(전략적 완충지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강제수단 미보유로 제재효과 미흡
 - 한국(개성공단 전면 폐쇄, 2016)· 미국(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2017)· 일본(인적왕래, 자금이동, 선박 입출항 금지 강화, 2016)· EU(포괄적 대북 독자제재 조치, 2016)의 독자적 대북 제재
 - * 대화 및 대북 제재로 북한 핵개발 저지 실패

3. 전술핵 재배치 관련 쟁점

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다. 4D 작전개념 구체화

- 2015년 11월 제47차 SCM에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승인
 - * 4D 작전개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징후가 포착되면 자위권적 선제조치개념을 적용하여 미리 군사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예방
- 북한의 핵과 생·화학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
 -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 교란(Disrupt)
 - 파괴(Destroy)
 - 방어(Defense)
- 확장억제전략개념 구현을 위해 확장억제 수단의 구체적 운용개념이 포함된 「한·미 공동 핵미사일 대응작전계획」 수립
 - * 미국의 핵우산정책 신뢰성 제고 및 공고화의 상징물로 전술핵 재배치 포함

5. 전술핵 재배치

가. 유럽의 핵 공유

- 핵공유 프로토콜 운용원칙
 - 미국: 핵사용 결정권 독점(목표물 선정, 작전계획 수립, 무기 관리 및 통제, 핵사용 결정) ↔ 핵무기 운용 및 발사에 관한 기본권한은 대통령이 독점
 - 배치 국가(5개국): 자국 공군기로 전술핵 탄두를 이송하여 목표물에 투하
- 핵계획그룹 운영(1966년 특별위원회, 1974년 명칭 개칭)
 - 핵 사용에 관한 나토(NATO) 차원의 정치지침 작성
 - 국방부 장관급 각료가 참석하는 정기회의 개최
 - * 상설 지원조직
 - 실무그룹(Staff Group, 1968)이 사무국 역할
 - 고위그룹(High Level Group, 1977)이 논의의 연속성 강화 및 기술적 자문

나. 한국의 대북 핵균형정책 추진: 전술핵 재배치

- 북핵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위협 인식
 - ICBM, SLBM, IRBM으로 미국 본토와 미국의 아시아 군사기지 타격 위협
 - : 워싱턴 불바다, 괌 포위사격 등 9·11 테러이후 국토내 전쟁위협 인식
 - * 한국을 돕기위해 미국에 대한 북한 핵공격 위협을 감수할 수 있나?
-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
 -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 추구
 - 모든 군사적 옵션 검토
-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
 - 2012년 5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전술핵무기 재배치 권고(국무부 반대로 무산)
 - 2016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
- 전술핵 재배치 추진: 우리의 핵사용 의지 강력 현시
 - 확장억제 수단(핵우산) 신뢰성 확보
 - : 북한의 핵압박 및 핵사용 억제

- 전술핵 무기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11.18)’ 파기
- 북한의 핵 보유 인정
- 핵전쟁 가능성 증가
- 대화와 협상 가능성 소멸

* 한반도에 ‘공포의 균형’ 유지로 전쟁과 도발 가능성 감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가능성
미국의 전술핵 철수와 북한의 비핵화 맞교환 협상

나. 미국의 비핵화 정책과 전술핵무기 해외배치 축소정책

- 1991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정책 견지
- 전술핵무기 배치 축소(유럽 5개국 150~200여기 배치)
- 핵군축 협상에서 전략핵뿐만 아니라 전술핵도 포함

다. 외교·전략적 갈등 촉발 가능성

-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문제로 중국 및 러시아와 갈등 유발
-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중국 및 러시아와 새로운 갈등 유발 우려

라. 전술핵 재배치의 비용대비 효율성

- 전술핵 유지 및 관리 부담
 - 핵탄두(B-61) 및 격납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
 - 운반수단(항공기) 성능 개량/ 전력화 비용
- 전술핵의 군사적 실효성 및 효율성
 - 전술핵의 군사적 실효성 소진(전략핵, 첨단무기로 대체)
 - 전술핵 배치의 군사적 효율성 의문(항공모함, 폭격기, 잠수함 이용)

4. 북핵 미사일 위협 대처방안

가. 미국의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간 확장억제 협의체계 운영

- 1978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부터 매년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원칙 천명(계속)
- 2009년 6월 「한·미 동맹 미래비전」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 2010년 10월 제42차 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제도화 합의
- 2013년 10월 제45차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징후포착시 한·미가 선제적으로 대응)’ 완성
- 2015년 ‘억제전략위원회(DSC)’ 구성, 2016년 ‘고위급 외교·국방 전략협의체(EDSCG)’ 설치 합의

나. 미국의 확장억제력(핵우산) 신뢰성 제고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의 능력을 향상시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시 미국의 확장억제전략 실행 제한 가능
- 미국의 핵 우산정책 공고화 및 한·미 동맹 강화

-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
- 남북한의 비핵화 협상

• 토론 2 •

전술핵 재배치의
정당성과 한계

유 동 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전술핵 재배치의 정당성과 한계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I. 치명적인 안보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

북한은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연이은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용 북극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연이어 단행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우리에게 발사한다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체계로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위협 상황에서 아직도 일부 정치세력이나 학자 및 언론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하는가 하면, 현존하는 유일한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추가 배치 등을 평화위협 운운하는 기만적인 논리 등을 동원하여 총력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어 우려된다.

북한의 핵위협이 절박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의 적절한 행사라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주최 측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송대성 교수님과 김태우 교수님은 이 분야 국내 최고전문가로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하여 핵심적 사안을 짜임새 있게 분석하고 있다. 토론자는 동발제문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간략히 피력하고자 한다.

II. 북한핵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역대 정부의 실패한 북핵 억제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또다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

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역대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기조를 견지하며 남북대화나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주지하듯이 모두 실패하였음을 직시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만형론과 햇볕론이란 미명하에 ‘북한눈치보기-북한 자극하지 않기-북한 비위맞추기-북한 퍼주기정책’으로 일관했으나, 돌아온 것은 민족화해가 아니라 2차례 핵실험과 3차례 장거리 미사일실험 및 연평해전 등 군사도발이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제네바합의(1994)를 타결시키며 연간 중유50만톤 제공, 경수로 2기 제공 등을 추진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은 13년 동안 북핵체제의 해체는 커녕 도리어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를 허용하고 말았다. 결국 그 동안 진행된 6자회담이 이른바 ‘핵보유를 위한 시간 별기와 경제지원 확보’로 악용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드레스덴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시동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결국 3차례 핵실험(3-5차 핵실험)만 허용한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종합해 볼 때,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핵무기 및 북핵시설 전면 해체)은 실현 불가능한데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와 얼치기 안보론자들은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한계

2006년 제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하고 있다. 확장억제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을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으로 보호하기 위한 억제력으로 겨우 PAC-2와 PAC-3 등 저고도 패트리아트 미사일방어시스템만 구축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 군은 2020년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나, 현 상태에

서는 북한미사일 발사 시 제한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중고도 및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THAAD) 배치이나,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다가, 제5차 핵실험을 당하고 서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바 있다. 황교안 권한 대행 시절 사드(THAAD) 배치를 일부 단행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추가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해도 킬체인(Kill Chain)이 구축될 때 까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UN과 국제사회 제재의 한계

UN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북핵과 미사일도발을 막기 위해 그 동안, UN결의안 제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71호 및 다방면의 노력(금융제재, 전략물자수출 제한 등)을 기울였으나 결국 막대한 경비와 시간만 낭비한 채,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발사 등을 막지 못했다.

사실상 국제사회는 북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국면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6차회담 등), 경제제재(UN 및 미국 등 금융제재 등) 등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경제적 제재 중 북한 경제붕쇄라는 유용한 수단이 존재하나 여기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바로 북한의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10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 중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 조항은 북한 및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을 제재하여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나, 본질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외치며,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치명적 안보위협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Ⅲ.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과 한계

첫째,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한반도의 핵 균형(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불안정하나마 일단 현존하는 북한의 핵공갈과 핵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특히 전술핵무기의 속성 상 북한의 핵기지와 군사시설 및 북정권 심장부 등 군사적

목표에만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저항을 최소화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사드 배치에도 개거품을 물으며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 등을 상기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둘째, 북핵 해결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론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이 언제까지 지탱될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한국의 애국적 자주국방론자들의 핵무장론이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 확산을 억지할 수도 있다. 일본이 핵무장할 경우 러시아, 중국과 북한에 이어 한반도가 자칫 핵전장(核戰場)화 될 수 있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다.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가 일본 등의 핵무장을 단기적으로 억지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변수이다.

IV. 정책제언: 김정은 정권의 해체, 붕괴전략 시도

우리는 전술핵의 재배치로 불안정하나마 현존하는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제제가 성사된다고 하여도, 김정은 정권이 견재하는 한 결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핵문제는 先代 수령(김일성-김정일)의 유훈(遺訓)사업이며,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와 2016년 제7차 당대회 시 채택한 ‘핵무력 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에 걸려 있어, 이를 포기할 경우 김정은은 ‘혁명의 배신자’로 전락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축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로 현존하는 북핵 위협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그 이유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란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까지 핵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북핵 및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대응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연이어 강행하는 저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핵실험을 한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1-15억불로 추산된다. 이는 국제곡물시장에서 옥수수 450만톤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북한주민 1년 10개월분의 식량에 해당된다. 또한 광명성호, 화성-14형 등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략 4억 달러 내외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 등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진력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목표인 대남적화전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전한 반도의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선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련 실험을 자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북한의 의도(대한민국 적화)가 명백한 상태에서는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나 대책마련이 아닌 상위 목표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김정은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언급하나, 이는 북한과 같은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에는 적합지 않은 개념이다. ‘레짐 콜랩스’(Regime Collapse) 즉 정권붕괴가 적합한 개념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반문명적인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70년 동안이나 당하고도 북한 김씨집단의 속성을 그리도 모르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발상은 실현불가능한 허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류문명사의 교훈은 평화란 싸워서 지키는 것이며, 구걸하고 애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에 대해 대화를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뿐임을 지적한다.

한반도와 현대 문명사회의 명백한 악(惡)인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정권을 해체시키지 않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동안 북한의 협박과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불했던 막대한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함을 제언한다. 김정은 정권의 해체만이 한반도 분단체제의 모순과 반문명적인 핵개발 등 평화위협을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지적한다. 끝.

토론 3

'북핵 · 미사일'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전략

김 운 회
동양대 교수

2017

‘북핵·미사일’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전략

- ‘라오콘 구하기(Saving Laocoon)’ 프로젝트 -



자유한국당

사드對策委 委員 金雲會

2017.8.23



<라오콘 구하기 프로젝트(Saving Laocoon Project)> 설명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의 10년 동안 계속된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남기고 철수하는 위장 전술을 폈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간 트로이군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 놓고 승리의 기쁨에 취하였다. 새벽이 되어 목마 안에 숨어 있던 오디세우스 등이 빠져 나와 성문을 열어 주었고 그리스군이 쳐들어와 트로이성은 함락되었다. 당시 라오콘(Laocoon)은 트로이인들에게 “목마를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경고하다가 바다에서 나온 거대한 뱀에 휘감겨 목숨을 잃었다.



목차

현대 한국현실의 이해 - 주적(主敵)이 사라진 공간 -

[CHECK POINT] 中國의 對한반도 전략 분석 : 기본전략은 '이이제이(以夷制夷)'

[CHECK POINT] 中國의 전략목표는 한반도 美軍 철수

제 1 장. 북핵·미사일에 대한 국가적 대응

[CHECK POINT] 맥클러니 장군 인터뷰

제 2 장. 한국좌파의 이해

제 3 장. 좌파 진지에 대한 대응방안

제 4 장. 9개의 우파 진지 구축방안

- 북핵과 좌파 진지에 대한 대응방안 -

제 5 장. 애국시민단체와의 연계 강화



현대 한국현실의 이해 - 주적(主敵)이 사라진 공간 -

✘ 현재의 한국은 단순한 남남갈등이나 남북갈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일종의 계급적 전쟁 상황임.**

✘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3면성을 제시.**

☞ 3면성(三面性)이란 **국민적 분노, 확률성, 지배성** 등을 말함.

☞ 확률성이란 軍지휘관의 효율성, 지배성이란 행정부 및 국가기구적인 차원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의미.

☞ 클라우제비츠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국민들의 적대국가에 대한 분노**라 지적.

☞ 전쟁이란 적대적인 두 국가의 국민적 분노의 상호상승작용(inter-escalate)이라고 클라우제비츠는 본 것.

✘ **좌파의 전쟁 개념**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대해 엥겔스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계급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현대전은 민족국가 전쟁이라는 외피보다도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내부적 폭력상황도 전쟁이라고 규정.

☞ 자본주의 국가는 지속적인 계급전쟁이 수행 중인 상황이라는 의미.

✘ **루이스 리처드슨(Lewis Fry Richardson)의 전쟁방정식.**

☞ 전쟁에 대한 수학적 분석의 선구자인 영국의 물리학자인 리처드슨의 전쟁방정식에 따르면, 군비 증강과 전쟁의 승패는 결국 적국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함(Aims & Industry statistics deadly quarrels, 1960).

✘ **한국 좌파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있음.** 이 자체가 바로 전쟁 상태에 돌입해 있음을 의미. 적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음.

✘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두 가지 신화가 생김. **미국은 북한에 무력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 중국은 결코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24년 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나선 미국·중국·한국 등 관련국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신화의 벽을 넘지 못했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이 벽을 넘으려 함** ⇨ 6·25 이후 최대 위기

✘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공개강연에서 “제 소견은 명확하다”며 ‘조속한 사드(THAAD) 배치’를 여러 차례 강조.
 ①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맹간 안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동아일보> 2017.7.14.)
 ① “한반도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야하고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하위 개념”이라고 언급.
 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반前 총장은 “현금이 바로 유용될 수 있는 구석도 있고 유엔 안보리의 7개 대북제재 결의안과 상충된다.”며 “성급히 (재개를) 논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 향후 분석과 대비의 방향 모색이 필요

- ① 북한이 ICBM으로 전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함.
 - ①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시진핑 주석은 노골적으로 북한을 혈맹이라고 표방.
- ①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 ⇨ 대화가 해결책이라는 천진난만한 생각을 버릴 것.
- ① 현대 한국좌파의 성격분석과 동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 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파의 대응논리를 구성 ⇨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식을 구축.
 - ① 광범위한 좌파의 진지들에 대한 방어전을 수행해야 함.

[CHECK POINT] 中國의 對한반도 전략 전술 : 기본전략은 ‘이이제이(以夷制夷)’

✘ 중국인들의 전쟁 특성

- ① 수세(守勢)에 능하고, 공세(攻勢)에 약하다. 지구전(持久戰)에 능하고 속전(速戰)에 서툴다.
- ① 계책(計策)에 능하고, 역전(力戰)에 무능하다. 강처(強處)를 피하고 약점(弱點)의 공격에 편중한다.
- ① 심리조종이 교묘하고, 선전(宣傳)을 잘한다. 주민의 자위력(自衛力)과 미신(迷信)을 이용한다.

✘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다양한 형태

- ① 이호경식지계(二虎競食之計) :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다투어 잡아먹게 하는 계략.
 - ⇨ 二虎를 이간하여 서로 싸우게 만들어 큰 상처를 입으면 즉각 공격하여 두 마리 모두를 죽이는 전술.
- ① 구호탄랑지계(驅虎吞狼之計) : 범을 몰아 승냥이를 잡아먹게 하는 계책.
- ① 대기응양지계(帶飢鷹養之計) : ‘여우와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먼저 매패를 굶주리게 하는 전략.
- ① 굴갱대호지계(掘坑待虎之計) : 굴을 파고 호랑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 호랑이가 굴로 들어가면 사로 잡는 방법.

✘ 한족들의 일반적 전략전술 방향과 순서

- ① 욕속부달(欲速不達) : 서두르지 않지만 선수필승(先手必勝 : 반드시 선수를 잡음) 전략을 구사.
- ① 소리장도(笑裏藏刀) : 웃음 뒤에 칼날을 숨김 즉 책략을 철저히 감추고 우호적으로 대함.
- ① 혼수모어(混水摸魚) : 흙탕물을 일으켜 정신이 산란해진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 ① 지상매괴(指桑罵槐) : 뽕나무를 가리키며 헤나나무를 욕하다 ⇨ 상대방에게 들으란 듯 다른 사례로 헐박하는 것.
- ① 차계생단(借鷄生蛋) : 다른 사람의 닭을 빌려서 알을 낳게 한다.
- ① 차도살인(借刀殺人) : 남의 칼을 빌려 다른 사람을 죽인다 ⇨ 남의 힘으로 적을 죽임

- ✘ 결정적 순간마다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익에 대한 중국 나름의 계산 때문"
- ✘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사드가 중국에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드를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보는 중국 지도부가 사드를 통해 **한반도에서 미·중 간 힘의 균형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
- ✘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를 중국이 거부할 수 있음을 과시,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이란 관측임.
 -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해 사드를 뺄 수 있다면 (아시아) 대륙에서 (한·미 동맹의) 린치 핀(linchpin·핵심축)을 성공적으로 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해양 파위를 갖고, 중국은 대륙의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아시아)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고 함.
-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셈법도 한·미와 다르다**는 분석.
 - ▶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약화시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흔들겠다는 계산.
 - ▶ 북한이 핵 탑재 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유사시 한국과 일본에 증원군을 파견할 때 망설일 수밖에 없고, 이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 중국은 6·25 때부터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대함. 북한의 핵 탑재 미사일 위협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으로선 오랜 숙원이 이뤄지는 셈.

제 1 장. 북핵·미사일에 대한 국가적 대응



북한의 핵무기와 정책목표

- ✘ 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
 - ▶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 탑재중량 700kg)에 탑재할 정도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
 - ▶ 탑재중량이 큰 모든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 가능 → 언제든지 한국을 공격 가능.
- ✘ ICBM을 개발 시, 미국본토 공격을 빌미로 주한미군을 철수 협박 가능(박휘락, 2017)
 - ▶ 한국에는 서북도서를 양보 강요, 보안법을 폐지, 연방제 통일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것
 - ▶ "전체 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



북한 핵전략의 특징 (김재엽, 2016, 41)

- ✘ 핵무기를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전략무기로 규정.
- ✘ 핵무기의 대상이 상대방의 핵공격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재래식 군사력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모호성'을 유지.
- ✘ '적대적인 핵보유국'(미국)과 이에 가담하는 동맹국을 포함시켜 한국도 북한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 ✘ 핵무기를 전시(戰時)의 실제 사용뿐만 아니라 평시(平時)에도 정치적인 위협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음.



David J. Bishop(2005) -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방안

- ✘ 개입(Engagement) -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 ✘ 봉쇄(Containment) - 강압적 외교, 경제제재, 군사력의 현시 등을 통한 북핵의 억지
- ✘ 예방공격(Preemptive Action) -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공격
- ✘ 무대응(do nothing) - 적대적 무시(정권교체)를 포함한 무대응

위의 방안들 가운데 비숍이 추천하는 것은 개입전략과 봉쇄전략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 현재 한국정부는 개입의 방안을 추진하고 미국은 봉쇄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비숍의 전략이 진행되고 있음.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3축 체계

- ✘ 킬체인(방공미사일체계) - 미사일 발사 징후 시, 도발원점 선제타격(2020년 구축 예정)
 - ⇒ 선제타격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선제 타격을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한국. 중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 그 효과는 매우 의심스러움.
 - ✘ 한국형 미사일 체계(KAMD)
 - ⇒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10~30km 고도로 낮게 날아오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결국 패트리엇이 가진 문제점(요격확률 저조, 지상피해)과 별로 다르지 않음.
 - ✘ 대량응징 보복체계(KMPR) ⇒ 유사시엔 이미 북한 군 수뇌부가 지하 병크로 이동한 후 이므로 효과가 의심스러움.
- 킬체인이나 KAMD 모두 결국은 미군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 ⇒ 한미동맹이 없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는 불가능.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정책'과 북한의 핵그림자 전략

- ✘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ence) 정책은 북한의 실제적인 핵무기 사용은 억제가능하나 한국에 대한 '핵그림자 전략(Nuclear Shadow strategy)' 즉 '한국 겁주기' 전략이 억제되는 것은 아님.
- ✘ '핵그림자 전략(Nuclear Shadow strategy)'은 한국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음
 - ① 남북간의 군사적 비대칭화 현상 만연 ⇒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력 상실
 - ① 김정은에 의한 한국 정치의 지배 ⇒ 정치적 주종관계의 형성
 - ① 재래식 군사도발 및 갈등의 상존화 ⇒ 한국의 심리적 위축
 - ① 미국의 피로감 증대
- ✘ 한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핵무장 대신 '지향성 에너지 무기(Direction Energy Weapon) 개발 및 실전배치가 일부에서는 제기됨. ⇒ 인명 살상 없이 전자기파로 핵시설 파괴.



이스라엘의 사례 : Tit-for-Tat strategy

-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 임박한 위협이든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든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공격감행 ⇒ '능동적 자주전략(Positive Self-Reliance Strategy)'
- ✘ 이스라엘의 '능동적 자주전략'의 특성
 - ① 선제공격 전략. 가능한 적보다 먼저 공격하여 전쟁 주도권을 획득해야한다.
 - ① '적 영토로의 전쟁 이전' 전략, '최단시간 내 결정적 승리 도모' 전략
- ✘ '삼손옵션(Samson Oprion)' : 선제 핵무기 공격으로 국가 존립 위기 시에 최후의 보복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전략. 즉, 구약성서의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더라도 파괴자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



한미정상회담, G20과 현정부의 정책(2017)

- ✳️ 북한이 남북 합의문 가운데 유독 6·15선언(2000)과 10·4 합의(2007)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단서 없이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
 - 👉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은 핵 보유 인정이 기본 전제이므로 "핵 폐기와 교환하자"는 협상안은 수용 불가.
- ✳️ 시진핑은 "북한이 여전히 중국의 혈맹(血盟)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7.6 한중 정상회담, G20)
- ✳️ 한국 정부의 흡수 통일 불가(不可)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전혀 다름 👉 통미봉남(通美封南).
 - 👉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에 초점.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목표. 그 결과는 미국의 한국과의 군사 공조를 중단하고 주한 미군도 철수해야 함.
- ✳️ 한강의 기적의 바탕은 한미동맹임. 한미동맹은 원원의 전략.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70여년의 동맹임.
 - 👉 현 정부의 정책적 모호성과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주의가 요망됨.
- ✳️ 문제는 한국의 좌파단체들의 준동임.
 - 민노총 · 참여연대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소속 3000여명(주최측 추산)이 6월24일 오후 서울 미국 대사관 주변을 둘러싸고 반미 시위를 하는 등 한미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음. 이 같이 미 대사관이 시위대에 완전히 포위된 것은 이번이 처음.<연합 뉴스> 2017.6.24)
- ✳️ 향후 한국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요)
 - 👉 한국의 대화정책과 미국의 봉쇄정책의 충돌. 보수의 분열로 인한 통일적 체제 수호세력의 약화.
 - 👉 급진좌파들의 강력한 사드배치 반대 및 반미 정치운동의 강화.
 - 👉 미국의 대한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미국 내의 혐한(嫌韓) 분위기 증가.
 - 👉 중국의 노골적인 정치 간섭 및 한미 이간 책동.
 - 👉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의 강화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한국내 좌파들의 준동.



북한 ICBM 발사후 전개될 가상 시나리오 (<동아일보> 2017.8.1)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전개될 가상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	한국에 미칠 파장
1 북한의 추가 도발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선제타격	현재로서는 낮음	북한 보복으로 전면전 확대 우려
2 원유공급 중단 등 대북제재 강화 유엔 차원의 고강도 경제원유공급 중단 등과 국가법 독자제재(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중국 협조가 관건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 압박할 현실적 수단
3 한국의 핵무장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	국제사회 동의 얻기 어려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공포의 균형 달성
4 북-미 양자대화 통한 핵 동결 합의 북한, 핵시설 동결 및 미사일 발사 유예 조건으로 북-미 협상 진격 개시	실현 가능성 예의 주시해야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한반도 비핵화 요원. '코리아 패싱' 현상 심화
5 중국, 러시아의 적극 중재로 북한 회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설득 또는 압박 등 외교적 해법	중국 태도로 보아 난망	한국으로서선 바람직한 시나리오



북한 핵전략 대응방안 : 美전술 핵무기 再배치(박휘락, 2017)

"핵무장한 적과 싸우는 나라는 일본처럼 대들다가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 모겐소(Morgenthau) -

- ✳️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임.
 - 👉 하루빨리 북핵으로 인한 '공포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 1차적으로는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망(BMD)를 구축이 필요.
 - 👉 사드 배치 및 추가로 사드 1~2개 포대 구매.
 - ⌚ 7월 28일, 국방부가 성주 사드포대에 대해 최장 15개월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
 - ⌚ 7월 29일 새벽, 문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

- ❗ 논란이던 전자파도 실제 광 미군 기지에 가서 측정한 결과 휴대전화 수준에도 못 미침.<조선일보>
- 🔧 PAC(파트리어트)-3을 추가 구매, 주요도시 배치.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조기 개발하여 수도권 방어.
- 🔧 핵미사일 공격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적 개시.

✳️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의 한반도 재배치.**

- 🔧 자체 핵무장은 현재로는 쉽지 않고 당장 시급하게는 미국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가 필요.
- 🔧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B61계열의 핵탄두로 냉전종식 후 대부분 폐기, 현재 본토에 500기, 유럽에 180기를 보유, 러시아는 1000기~5000기 정도 보유.
- 🔧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배치는 1958년 1월 전후.**
 - ❗ 1957년 6월 북한이 대규모 화기를 비무장지대에 반입에 다른 긴급 조치의 성격.
 - ❗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감축 대신에 핵을 통하여 전쟁을 억제한다는 뉴룩(New Look) 정책을 추진.
 - ❗ **1991년 철수** - 냉전종식에 따른 미소 간의 합의에 의한 것

✳️ 전술 핵무기 재배치의 효용

- 🔧 **비핵보유국의 핵전력 불균형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시정 가능** ➡ 비핵화 협상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토대.
- 🔧 차선책으로 쌍방의 핵보유로 인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유지.**
- 🔧 재래식 기습공격의 효과적 차단. 🔧 **안보상황이 개선되면 철수 가능.** 🔧 **한미동맹 강화의 역할(결속도 등).**
- 🔧 유럽 전술 핵무기는 미국의 소유지만 전시에는 동맹국들에게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형태.

✳️ 전술핵무기 재배치의 문제점

- 🔧 좌파의 준동과 방해공작 및 법적 제도적 문제점 검토(핵무기 비확산협정, 정전협정 등)
- 🔧 **일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유사시에 일본과 공유하는 방안도 가능.**
 - ❗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할 경우 나토사령부를 참고하여 큰 논란을 야기하지 않았듯이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

[CHECK POINT] 맥클러니 장군 인터뷰 "미국은 15분만에 북한을 완전히 쓸어버린다"(중요)

<FOX News> 2017.8.8 https://www.youtube.com/watch?v=npIr6FbU_zg

✳️ 맥클러니 장군(미국 공군 참모차장, 태평양 공군사령관,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공군사령관 등) 인터뷰 주요 내용

[앵커 우먼]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유엔 제재에 대해 미국에 1000배로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

🔧 북한이 지금 당장은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년 안으로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만일 김정은이 방사포로 서울을 폭격하면, 미국의 전면적인 핵 반격으로 모든 북한의 도시가 사라집니다. 당신(김정은)은 끝장이 날 것입니다. 내 말을 명심하길 ...

[앵커우먼] 한국 민간인이 많이 죽을 것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우리가 즉각(수분 안에) 핵무기와 함께 '크롬 돔' 이라는 Airborne Alert(공중대기)에 돌입하고 다른 군사적 물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15분을 살아남지 못합니다. 10분~15분 만에 김정은이 서울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 공격명령과 동시에 우리의 크루즈 미사일 2000개가 하늘을 가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핵 반격 능력 때문에 15분 만에 북한에는 완전히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 2 장. 한국좌파의 이해



현대 한국 좌파의 이해 - 대한민국 좌파, 그들은 누구인가? -

- ✘ 건강한 의미의 좌파는 자본주의 사회를 보다 도덕적 인간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진보의 철학.
 - 하지만 한국 좌파는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진보의 논의와는 거리가 먼 친북·종북의 프레임에 갇힘
- ✘ 사상적 기저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 '그람시 이론 + 알튀제 이론 + 주체사상'** 등이 근간.
 - 프랑스의 경우, 조절주의 등 고급이론이 나타난 반면, 한국은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매우 교조적인 좌파의 행태.
- ✘ **그람시의 이론은 혁명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좌파 모두가 적극 활용.** 알튀세르이론은 좌파 고급 지식인들이 선호
 - ☞ 좌파 고급지식인들은 알튀세르 이론이나 '조절주의 이론' 등을 토대로 체제를 고차원적으로 비판.
 - ☞ 민자통(민주, 자주, 통일) 운동을 강조하는 주사파는 보다 직접적으로 감성적으로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것이 한국 좌파의 현주소. ☞ 민자통 운동세력이 사실상 전체 좌파운동을 주도.
- ✘ 우파가 좌파의 고급이론들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파 지식인들이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할 정도로 성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
 - ☞ 이들 고급 좌파 지식인들은 적화 후 <反공화국 종파 반동세력>으로 극렬한 숙청대상.
 - ☞ 그 동안 행태로 보면 현실적 좌파운동에서는 항상 연합하여 결국은 주사파 운동에 협력.
- ✘ **한국 좌파의 가장 큰 불행은 종북 주사파(NL)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것.**
 - ☞ 198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사상들이 '잡사상(雜思想)'이라 하여 사라지고 주체사상이 주류를 형성.
 - ☞ 북한이 60년 이상 강력한 대남혁명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좌파들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주사파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좌파에서 소외된 까닭.



현대 한국 좌파의 이해 - 한국 좌파의 특이성 -

- ✘ 한국좌파의 복잡성과 특이성은 귀족성(貴族性), 중산층적(中産層的) 성격을 띠는 점.
 - ☞ 상위 10%의 기득권(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교사 등이 주축으로 세계적 수준의 임금과 연금혜택을 봄)을 대변하는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장악, 이들이 친북 또는 종북적 올드 레프트 프레임(Old Left Frame)에 빠져 있다는 점.
 - ☞ **2017 현재** 한국의 소득 점유율을 보면 상위 10%가 국민 소득의 48.5%를 차지. 이들은 올드 레프트 프레임에 사로 잡혀 있으며 이들이 최상위 1%의 재벌과 특권층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 ☞ 1% 특권층에 대한 공격은 바로 상위 10%가 차지한 기득권에 대해 방어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으로 친북·종북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 무서운 일임.
- ✘ 민주당 정권의 실체를 주대한 사회민주주의연대의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함.

" 민주당의 주된 지지 기반은 바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교사 같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임금과 연금을 챙기고 있는 반면, 나머지 하층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은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밑바닥의 하층 노동자들은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하고도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보니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여 임금의 평준화를 이룰 꿈도 꾸지 않는, 탐욕스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 전교조 선생들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 주대환 인터뷰, <조선일보> 2017.6.15. -



현대 한국 좌파의 이해 - 그람시의 이론의 한국적 적용 -

- ✳ **그람시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 ☞ 혁명적 변혁에 있어서 '의식(意識)'의 역할을 주장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
 - ℳ 그람시는 서유럽의 자본주의가 매우 견고하다고 인식
 - ⓘ 지배층(부르조아)들의 힘과 동기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부르조아가 이 같은 **문화적인 '헤게모니(hegemony)와 연대(連帶)**를 유지하는 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불가능.
 - ℳ 그람시는 **다양한 변혁의 시도들도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 ℳ **정부를 전복시키기에는** 레닌주의적 혁명 전위대보다 일상적 사회현실과 연결된 **'대중정당'이 더 적합**하다고 역설.
 - ℳ 사회주의 혁명은 사회 전체가 변해가는 하나의 유기적 과정으로 파악 ☞ 의식개혁은 사회의 구조개혁과는 연계.
 - ℳ 그람시는 물리적 혁명만큼이나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중시하여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라는 말을 사용.
 - ⓘ 베트남 전쟁에서도 정치전으로 몰아서 군사전의 약세를 역전 ☞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의 장악 사례.
- ✳ **그람시의 '진지론(war of position)'**
 - ℳ 교육, 언론, 법, 대중문화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기구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시민사회 내에서 획득되는 '대중의 동의'를 통해서 계급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봄.
 - ℳ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려면, 체제를 지탱하는 이념적 헤게모니를 국가로 부터 탈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진지(陣地)를 구축하여 대항 이데올로기를 전파**해야한다고 주장.
- ✳ **그람시의 '진지론'과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투쟁에서 패배한 한국 우파**
 - ℳ 1980년대 이후 각종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좌파 진지들이 구축되었지만,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전체 사회운동을 주도할 때까지는 세력이 미약.**
 - ℳ 2000년, **PD 중심의 <민노당>이 창당**되자, 급진 주사파(이하 NL)는 군자산(충북 괴산)에 모여 '정치판에 뛰어 들 것'을 결의(2001). 이 때의 문건이 <군자산의 약속(맹약)>인데, **대중 정당을 통해 정권을 잡고,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후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는 계획이 정리.

- ℳ NL은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을 지지했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
- ℳ 2017년 현재 한국의 좌파 진지들은 수백 개 이상으로 매우 견고하게 구축. **현재로서는 우파가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기점으로 수많은 좌파진지들이 구축되었는데 이는 좌파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북한의 대남 전술적·전략적 성공이기도 함.
- ℳ **좌파 정권은 여러 형태로 진지 유지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한 반면, 우파 진지는 오히려 경제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급기야 **바른 정당에서는 전경련 해체라는 자해(自害) 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짐.
- ✳ **그람시의 '기동전(機動戰, war of movement)'** ☞ 기동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 한해서 사용 가능.
 - ℳ 그람시는 **전략론으로 '기동전과 '진지전' 개념**을 사용. '기동전'이란 두 개의 세력이 정면 대결.
 - ⓘ 선진국에서 '기동전'은 적합하지 않고, 점진적이고 전면적인 '진지전'이 적합
- ✳ **그람시의 '기동전'과 한국**
 - ℳ 현재 한국의 경우, 기동전은 두 가지.
 - ⓘ **외부적으로 북한**이 주체로 북한은 미군철수 이후에는 언제든지 기동전이 가능.
 - ⓘ **내부적으로 군부 내에 침투**하여 혁명의 만조기(그람시의 표현으로는 '유기적 위기')에 물리력을 동원.
 - ℳ 현재 좌파 정권이 **다소 온건하고 실용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군이 내부적 기동전을 구사할 이유는 없음. 다만 우파세력들이 **'급진 주사파 또는 중북세력의 준동을 어떤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통제하는가 ?'**가 관건.
 - ℳ 만약 현재 좌파 정권이 온건좌파를 가장한 급진좌파라면, 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철저히 감시해야 함.
- ✳ **그람시의 '유기적 위기(organic crisis)와 한국** ☞ '기동전'의 성공여부는 **유기적 위기**에 달려있음.
 - ℳ '유기적 위기'란 **지배계급이 장기간 치유가 어려운 구조적 모순에 직면한 경우**로 기동전을 사용할 수도 있음.
 - ℳ 광우병 사태, 한미FTA 반대, 호선·미선 사건, 세월호 사건, 민노총의 '민중총궐기(2015)',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박대통령 하야 투쟁(2016) 등은 유기적 위기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음.



현대 한국 좌파의 이해 - 알튀세르 이론 -

※ 알튀세르의 구조주의적 국가이론

☞ 마르크스는 국가는 자본에 의해 종속되어 자본가 계급이 만들어 낸 제도적 지배기구로 간주.

☞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를 제거해야 함.

☞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

⚡ 알튀세르는 국가를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구분

⚡ '억압적 국가 기구'는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세력이나 사상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정부, 군대, 경찰, 법원, 감옥 등 ☞ 물리력, 즉, 폭력을 통해 기능.

⚡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민들의 사고 방식이나 신념, 가치관, 더 나아가서 감성의 차원까지도 지배함으로써, 지배적 사회관계를 유지해 가는 기제

⚡ 이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계급투쟁의 장이라고 강조.

☞ 자본주의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재생산 기제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

※ 알튀세르의 호명이론(呼名理論) ☞ '객체의 주체화 이론'

☞ 객체에 불과한 존재가 마치 주체처럼 인식하면서 이 사회를 유지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이것을 '문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피지배계층이 스스로 자신을 사회의 '주체'라 인식함으로써 지배-피지배 계층은 유지되며 국가는 계속 자본주의 상태로 존속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

☞ <호명이론>은 '문화 이데올로기론'의 시발점. 객체의 주체화로의 왜곡이 자본주의의 본질 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유럽 지식인 사회에 큰 영향을 줌에 따라서 북한의 이른바 <주체사상>도 관심을 받게 됨.

※ 알튀세르의 <모순과 중첩결정>

☞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며, 이외의 모순들은 이 근본 모순의 피상적이고 변형된 형태에 불과.

☞ 그러나 모든 현상을 계급모순이라는 하나의 본질로 소급하여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논리적인 추상이자 관념에 불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마르크스주의란 과학과는 거리가 먼 '변형된 관념론'에 불과.

☞ 알튀세르는 '중첩결정'이 현실분석의 방법론적 토대가 되어야 함을 역설. '중첩결정'이란 프로이트의 용어(꿈의 내용은 하나의 의미로 환원될 수 없고 다양한 요소들이 중첩되어 꿈의 내용을 구성)

☞ '중첩결정'의 방법론을 마르크스주의에 적용할 경우 사회는 단일한 모순체계로는 설명되지 않음. 즉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각각의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은 단순히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논리적 추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

☞ 현실의 사회에서는 자본제 생산양식, 봉건제 생산양식, 사회주의 생산양식 등이 혼재. 따라서 하나의 생산양식에서 다른 생산양식으로 필연적으로 이행한다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은 극히 관념론적 추상에 불과.

☞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도 수많은 <사회구성체 논쟁>이 있었음. 이 같은 논쟁들을 종식시킨 것이 바로 <강철 서신>. <사회구성체>라는 것 자체가 마르크스주의의 근본 취지와 연관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복잡하여 분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끝없는 논쟁을 하지 말고 주사파로 무장하여 차라리 대남적화사업에 헌신하라는 말.



현대 한국 좌파의 이해 - 주체사상 -

✦ 주사파의 개요

☞ '주체사상'이란 용어는 4차 조선노동당 대회(1961) 이후부터 통용, 이를 체제 이념으로 정식화한 것은 김정일(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후). 1970년대 말까지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다른 것이 없으며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주체사상을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으로 확대시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능가하는 사상**이라고까지 주장.

✦ 주사파의 내용 핵심 : '계급' 대신 '사람'

☞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 즉 자주적,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

⚡ 지도지침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구현.

⚡ 주체사상은 인간 중심 세계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주의, 수령주의로 구성.

⚡ 다른 마르크스주의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중심 세계관과 수령주의.

☞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의 계급·혁명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계급' 대신 '사람'이란 개념을 제안함.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이 운명 개척의 주인이다."** 다만 **운명 개척의 온전한 주인이 되려면, 수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수령론'**.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자계급 독재' 개념을 1당 독재를 넘어 통치자 개인으로 확대한 것임.(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주체 확립에서 핵심이라고 하며 김일성 유일사상 하에서의 독재체제를 정당화.

☞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요한복음14:6)"와 같은 논리를 어설픈 사회과학 용어로 분식(扮飾)한 사이비 종교.

⚡ 김정일은"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 ... 혁명의 주체는 다름 아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고 함. 이것은 혈연론(血緣論)으로까지 발전하여 김일성-김정일의 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있음.

✦ 주체사상의 본질

☞ 북한의 주체사상의 본질은 생명을 주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 사회적인 부모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김일성의 백두혈통임. 따라서 **김일성가문을 아버지로 여기고 따르라는 것**.

☞ 루카치(Lukacs)를 비롯한 대부분 좌파 이론가들은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이 인간'주체'에 있다고 봄. 그러나 불행히도 이 같은 생각이 북한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정치철학인 주체사상으로 양질전화.

☞ 이 양질전화에 대해 가장 분노해야 할 사람들은 좌파 지식인인데 그것을 분노할 만큼 한국 주류 좌파들의 지적 수준이 이르지 못함. 일부는 양비론(兩非論)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결과론적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일을 자처.

☞ 북한의 주체사상은 가장 종교적인 정치사상이며 인간 구속을 극대화한 정치적 종교.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구성원들에 대한 끝없는 세뇌(洗腦)와 탄압이 필요. 결국 북한의 인간은 철저히 객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객체화된 민중은 중세의 노예나 농노와 유사한 형태.

☞ '객체의 가장(假裝)된 주체화'는 알튀세르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데, 주체사상은 아예 주체를 객체화, 노예화하고 있으니 북한 정권은 진보주의의 공적임.

제 3 장. 좌파 진지에 대한 대응방안



현대 한국 좌파 진지의 분쇄 방안 (개요)

-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을 '이론과 현실의 변증법'으로 극복 : 체제 붕괴에는 귀신, 체제 유지에는 등신 -
- 변증법적 진화론적 구조를 돌연변이적 혁신으로 극복 -

※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을 '이론과 현실의 변증법'으로 극복

- ⚡ 좌파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제 전복만을 전문적으로 연구(이론과 실천) 한다는 것**이고 이른바 혁명의 성공 후에 대한 대책(이론과 현실)이 없다는 점. 가령 한국이 적화(赤化)된 후, 이들의 사고는 **남북 좌파의 사회주의적 정의 실현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대한민국의 발달된 자본주의적 프레임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무식한 생각.

※ 국제 경제현실에서의 무지에서 오는 좌파의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 ⚡ 현대의 국제시장으로부터 유리된 사회주의가 성립하려고 하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서로 협조하여 일종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함.
 - ⚡ 사회주의 경제는 경제적 잉여(economic surplus)에 의한 구상무역제(求償貿易制)로 유지되기 때문에 주변 사회주의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경제체제는 붕괴 ⇒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북한이 이내 '고난의 행군'의 늪에 빠짐.
- ⚡ **한국에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경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바나나 공화국'으로 전락.** 또 사회주의 혁명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본이 광범위하게 이탈하고 많은 주요 인적 자원 또한 해외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경제의 붕괴상황이 올 것임.

- ⚡ **마르크스주의가 제대로 성립하려면 노동의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 전제되어야 함.**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세계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대립은 자본보다도 훨씬 더 심각. 어느 국가든지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데 그것은 자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이익을 위한 것.



좌파 진지의 분쇄 방안 (개요) -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을 '이론과 현실의 변증법'으로 극복 -

※ 한국 우파는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상실

- ⚡ 세련된 대응논리가 필요한 상황
 - ⚡ 안보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상황인데도 국민들은 무감각.
 - ⚡ 바른 정당의 일부 의원은 '중북몰이'를 한다고 자해(自害) 공격 중.
- ⚡ **좌파의 진지를 파괴하는 것이 핵심** ⇒ 이 진지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고 파괴하는가 하는 점.

※ 진지 파괴의 방식

- ⚡ **이론과 현실을 적용한 두 가지 방식**
 - ⚡ 직접적으로 진지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하여 공격하는 방법.
 - ⚡ 좌파 정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 자체적인 실정(失政)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또는 실용적 측면에서 와해**시키는 방법 등.
- ⚡ **실정(失政)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또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와해**시키는 방법의 예
 - ⚡ 속보이는 사드배치·전작권 전환 문제, 대책없는 원전 중단과 한국의 핵불능화, 자연파괴적 신재생에너지 정책, 세계와 역행하는 대북 지원 제의, 4대강 사업 되돌리기, 폭주 기관차 같은 비합리적 경제정책 등
 - ⚡ 독일과 달리 좌파정권에 비협조적이며 귀족화된 민노총과 좌파정부의 갈등, 등이 지속적으로 좌파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적극 공략.

제4장. 9개의 우파 진지 구축방안

- 북핵과 좌파 진지에 대한 대응방안 -



향후 포괄적 의미에서의 좌파의 정책 방향과 대응

- 아홉 개의 진지(9P) 구축으로 대항해야 함 -

✳ 향후 좌파들의 운동 방향 - 예측 가능한 정치상황

- ① 보수 우파 정당 및 국정원 등 대북 또는 대간첩 작전 조직 무력화(無力化) 시도.
- ① 민노총, 전교조 등 좌파 시민 단체 등의 통일전선 강화.
- ① 정치경제적 선전 강화 ⇨ 한국경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 의료 등)
- ①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전방위적 준동 및 노골적인 친중 사대 정책 강화.
- ①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재개 ⇨ 각 분야별로 북한 김정은 정권 퍼주기.
 - ① 해외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스크.
 - ① 김정남 암살사태에서, 북한 주재 말레이(친북 국가) 국민을 인질로 삼음 ⇨ 개성공단 폐쇄는 옳은 결정.
- ① 전시작전권 전환 공식화 ⇨ 자주국방의 명분아래 북한의 전격전에 대한 무방비.
- ①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한국과 미국간의 이간 정책.
 - ① 북한정권에 대해 미화 또는 간접적으로 옹호하려는 문화예술계의 광범위한 시도
- ① 남북 평화협정 협상의 시작과 함께 주한 미군 철수논의.
- ① 군대(軍隊)의 사상적 오염 강화 및 무력화(無力化) 시도.
- ①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전개 ⇨ 낮은 단계의 연방제.

✳ 이와 동시에 전방위적인 형태의 통일전선 전술이 나타남

- ① 중북의 통일전선 강화 : 중북에 의한 친북에 대한 지도와 견인(牽引)이 눈에 띠게 늘어남
 - ① 간첩 잡기를 중단함으로써 5만 여명(황장엽 추정)의 고정간첩들의 자유로운 활동.
 - ① 각 중북 세력과 중북 종교단체 등의 화합과 평화공세강화(베트남의 사례와 동일).
- ① 국정원 해체 또는 무력화와(無力化) 및 軍 지도부 내부의 애국성향의 인사 교체.
- ① 남북 평화협정 서명 및 발효
- ① 평화협정 서명 후 미군철수를 위한 정치공세 강화 및 문화예술계의 전방위적 프로파간다.
 - ① 전교조의 중북 또는 친북 교육 강화, 시대착오적인 항일, 과거사 등의 교육 강화.
 - ① 전교조의 교육에 부응하는 문화예술계의 좌파적 준동.
 - ①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는 광범위한 문화예술 책동.
- ① 중북 세력의 기동전 준비(베트남의 경우, 평화협정 체결 후 2년 내, 전쟁 개시 후 55일 만에 적화됨)
- ① 청와대 등 최고 지도부 내부의 사상적 및 실질적 오염 강화.

✳ 올바른 진지의 구축은 낭만적 한국좌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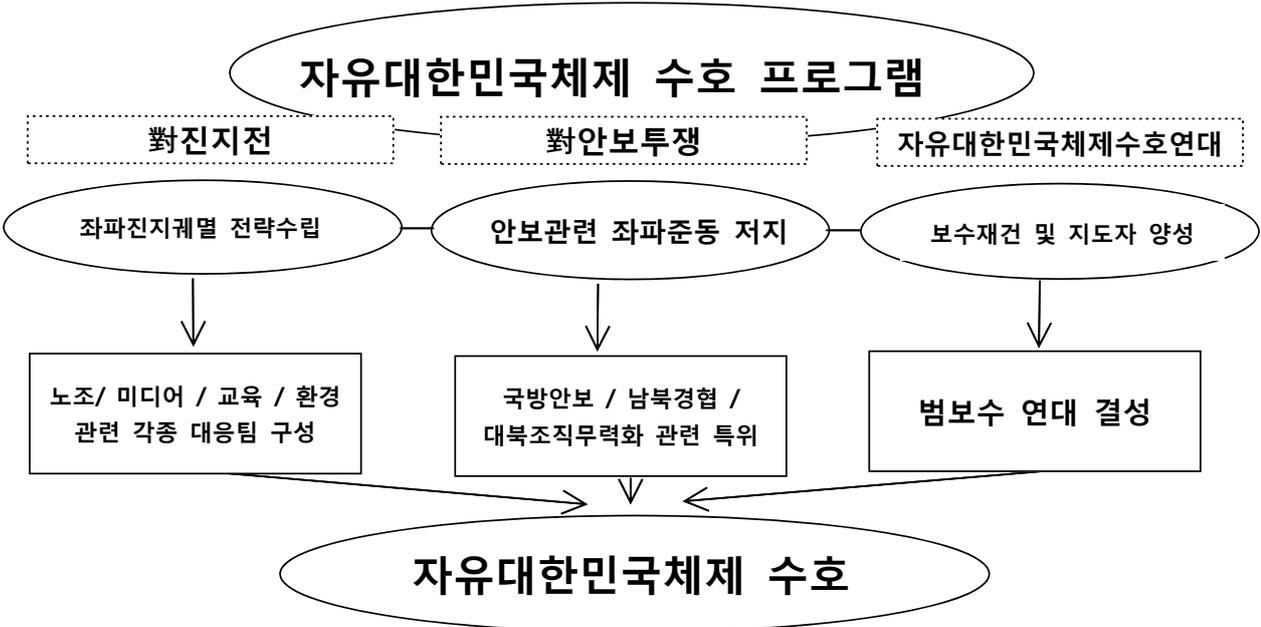
- ① 남북평화협정의 체결과 미군철수 사이의 기간에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중북 적화(赤化)를 막을 수 없음. 즉 대내외적 변화(가령 북한정권의 붕괴와 같은 것)가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이 5년 내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① 한국의 적화(赤化)란 좌파정권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김정은 정권에 의한 무력적화(武力赤化)로 민노총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수 정당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 국민의 당 등의 대부분 인사들은 적화 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내로 처형 또는 강제수용소로 직행하게 될 것임.(베트남 및 남로당 사례와 최근 북한의 사례)
- ① 이 같은 조치들은 북한정권으로부터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좌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도 중요함. 그들은 장래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장성택의 숙청을 보면서 이 사태를 낙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과거 남로당 인사들은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안에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이 처형되었음.

☞ 지난 2012년 후 140명에 이르는 당-정-군 고위간부들을 숙청. 여기에는 리영호 총참모장, 장성택과 추종자들,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조영남 국가계획부위원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최영건 내각부총리, 김용건 내각부총리 등도 포함. 이들은 대부분 권력의 실세들이었음.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 통진당, 민노총, 전교조도 예외가 아님.

✳ 통일전선 전술이 수행되는 단계에서 유의할 점(주의 요망)

- ☞ 위의 과정들이 단계별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 됨. 현재는 사드문제이지만 지속적으로 좌파의 준동방향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 지금부터라도 전투역량의 강화가 필요. 이를 위해서 내적으로는 투쟁성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정권의 실수를 바로 캐치하여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함.
- ☞ 좌파의 논리에 대한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 즉 각 단계별 행동지침을 개발하여 좌파들의 진지를 파괴하는 방식을 연구해야 함. **한국은 그람시의 진지론이 가장 성공한 나라.**
- ☞ 주의할 것은 1단계부터 철저히 막아야지 각 단계가 무너지면 다음 단계로 쉽게 전이(轉移)가 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자료를 만들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行動指針)을 만들어야 함.

 자유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한 유기적 연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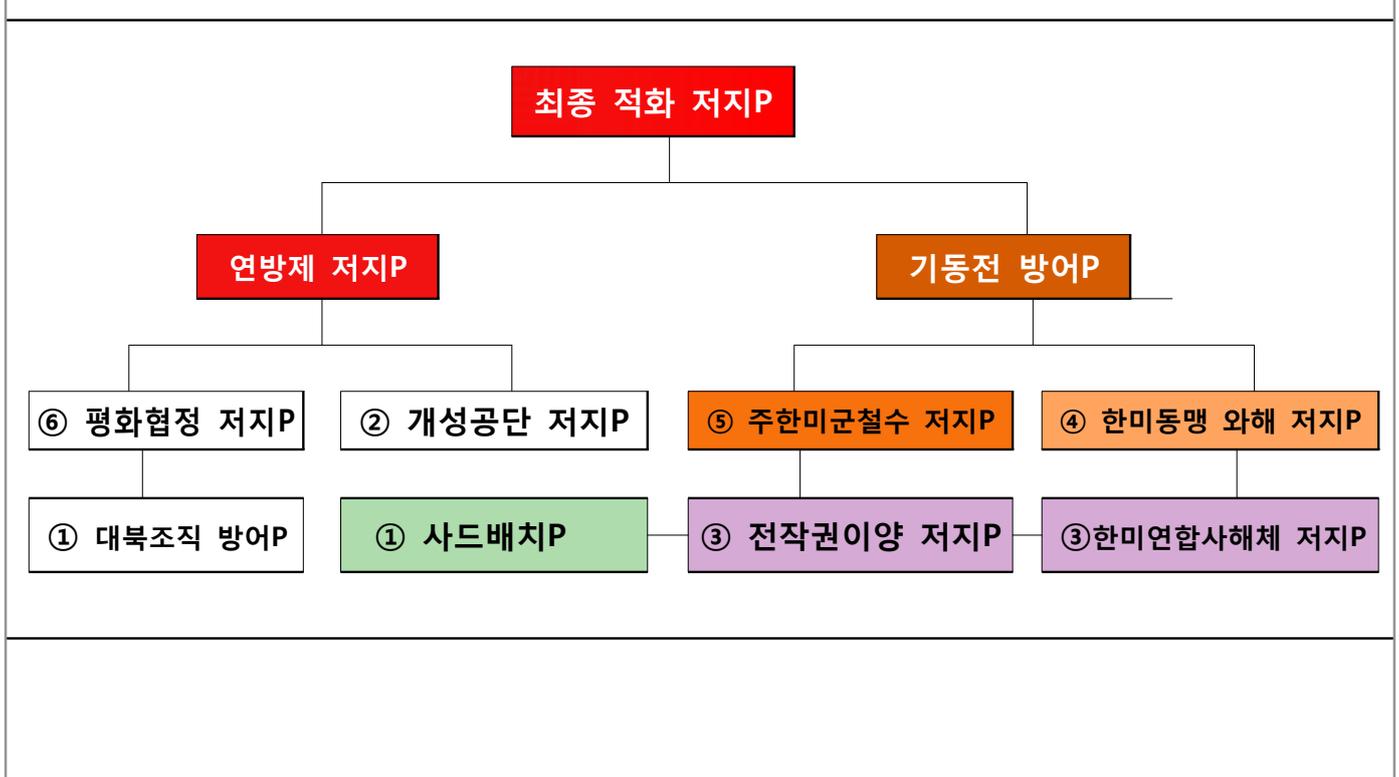


자유 대한민국 체제 수호 아홉 개의 진지 구축 - 구체적 전략 전술 내용

	對진지전	對안보투쟁	자유 대한민국 체제 수호연대
단계별 전략 전술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제수호 이데올로기의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정권의 위협성 체제수호 이데올로기 확립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장악 對진지전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파진지 파악 이데올로기적 대응 물리적 대응 좌파정권 비리감시단 귀족 좌파 감시단 기동전 감시단 한미간의 이간책동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계 및 언론계의 광범위한 반미책동저지 (평화 대화 가장) 지식인 사회에 적화위험성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드배치 철회 책동 저지 국정원과 대북조직 무력화 책동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보안법 철폐 저지 반미인사 정치권 진입을 저지 軍의 사상적 오염 강화책동 저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책동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핵그림자 정책 옹호책동 저지 전시작전권 전환 책동 저지 한미연합사 해체 책동 저지 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책동 저지 남북·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 책동 저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책동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적 위기 대응 북한 또는 한국내의 기동전 책동 저지 최종적 김정은 정권의 적화 저지 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재건 프로그램 - 콘트를 타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 대통합 프로그램 범보수 대연합 콘트를 타워 건설 범보수 원로 원탁회의 구성 범보수 지도자 양성 미디어 수호를 위한 범보수연대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제 수호형 언론 대응팀 체제 수호형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강화 체제 수호형 개인 방송 활성화 적화시 가장 큰 피해자 그룹 연대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제 수호형 탈북민 조직 연대 체제 수호형 퇴역 軍警 조직 연대 체제 수호형 종교단체 연대 강화
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파 검정 교과서 대응팀 언론노조 대응팀 문화 예술계 대응팀 좌파노조 대응팀 좌파 교육노조 대응팀 좌파 환경단체 대응팀 좌파 종교단체 대응팀 청년 조직 활성화 대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안보위원회(조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작전권 / 한미연합사 낮은단계연방제 / 한미동맹 / 주한미군 대북조직 무력화 대책 특별 위원회 남북경협 감시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특별위원회 기타 대북지원 사업 및 민간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재건팀 ⇨ 자유한국당 전국 조직 활용 미디어 수호를 위한 범보수연대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중복 미디어 세력과 연계 강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조직 연계 적화시 가장 큰 피해자 그룹 연대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관련단체와의 연계 강화



자유 대한민국 체제 수호 아홉 진지(P) 구축의 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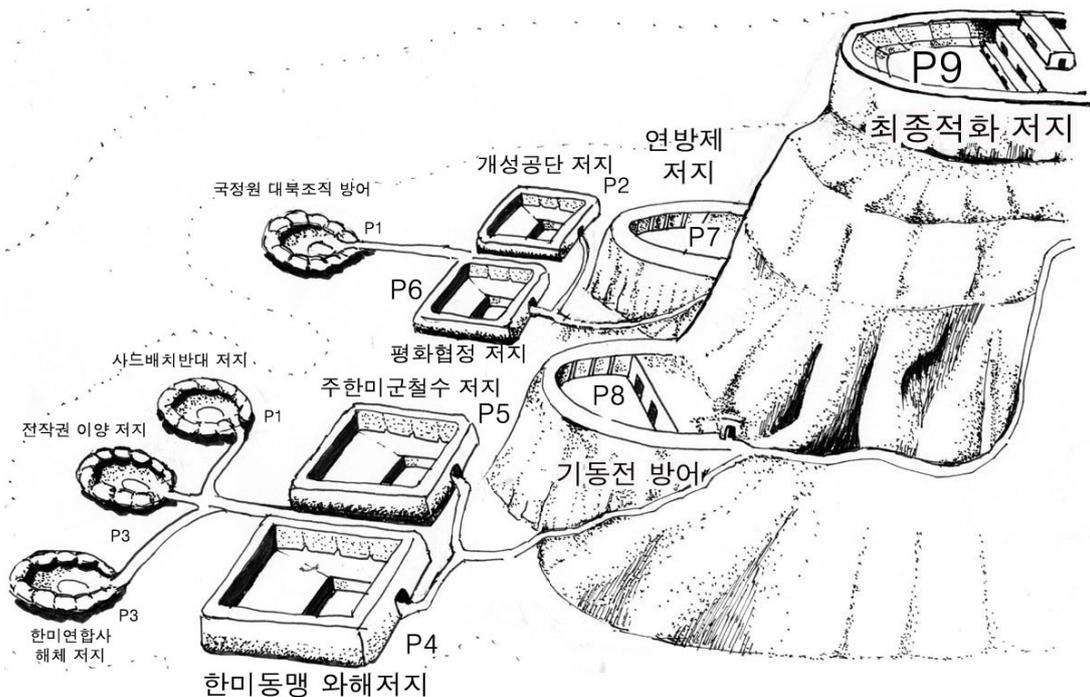




자유 대한민국 체제 수호 아홉 진지(P) 상황도



자유 대한민국 체제 수호 아홉 진지(P) 개념도





자유 대한민국 체제 수호 아홉 진지(P)의 구체적 내용



제 5 장. 애국시민단체와의 연계 강화

자유대한민국 수호
 목표 : 韓美同盟 강화와 自由大韓民國의 안정적 수호



【 세부 목표 】			
국회 및 정치권 내의 투쟁		외곽지원 체제 수립 및 투쟁	
【 역할 분담 】			
對진지전	對안보투쟁	체제수호연대	태극기 애국 집회의 활성화 보수원로 원탁회의
전문가그룹 실행 그룹	전문가그룹 실행 그룹	보수시민단체와 의 연계활성화	 각 지구별 조직 구성



주요 애국단체의 입장과 현상황 (2017.7.5. 간담회 및 8월 상황)

돈줄' 마른 보수단체...후원금 줄어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 단체들이 인력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후원이 끊긴 것이 큰 이유입니다.

[리포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실입니다. 최근 17명이던 상근 직원을 6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후원금이 크게 줄면서 운영난을 겪게 된 겁니다.

[조동근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기업체와 개인의) 지원이 줄었어요. 최근 상근 직원 중 일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런 상황은 다른 보수성향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센터인 자유기업원도 예산이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사무실을 옮기고 인력도 대폭 줄였습니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원장] "소규모의 싱크탱크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요... 과거에는 예산 규모가 20억 원 지출 규모였다면 앞으로는 연간 2억 원에서..."

전경련이 회원사들의 잇따른 탈퇴로 긴급 운영에 들어가면서 자유기업원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단한 겁니다. 전경련측은 "지난 2월 총회에서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을 없앴고 당분간 지원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지지 기반이 약하고 재정 자립 수준도 낮은 한국 보수단체의 취약한 경쟁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채널A> 2017-07-31

1 애국단체 총연합회(애총 : 이석복 회장) ⇨ 최대 규모의 애국단체 연합

1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 사드배치 국회비준 동의는 불가. 환경영향 평가는 금년 내에 종료할 것.
- 성주에서 민간인이 軍차량을 검문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

1 향후 방향

-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여당인 듯하는 관료주의 폐단에서 빠져 나올 것.
- 애국시민단체와의 연계투쟁을 강화할 것.

1 분석(이희범 사무총장)

- 좌파는 정치게임을 하는데, 우파는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기겠나?
- 개별 정치인들의 정치성 강화, 투쟁성, 현장성을 강화하라.
- 안경환 게이트(안경환-조국-참여연대 게이트)를 왜 제대로 정치 쟁점화 하지 않나?

1 바른 사회 시민회의(김태우 사무총장)

1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 성주에서는 사실상 민란(民亂) 상황임. 광장 민주주의 잣대를 중단해야 함.
- 중국에 대해 부질없는 기대감을 주지 말아야 함.

1 향후 방향

- 전교조("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라고 주장)를 방치하고서는 어떤 투쟁도 무의미
 - ⇨ 매년 수십 만이 좌파 전사로 양성되고 있음.
- 정치권은 애국단체 들에 대한 지원 관리 및 협력을 강화할 것.

1 자유민주연구원(조영기 연구원)

" 현재 대한민국의 6개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언론, NGO, 거리권력 "(유동렬 원장)

1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 연대투쟁 + 대중투쟁이 필요(그런데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음) ⇨ 지금 당장 길거리 투쟁에 나서라 !

1 향후 방향 ⇨ 그 동안 좌파의 투쟁 방식과 열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음.

- 국력은 경제력, 군사력, 사상력으로 구분, 우파는 사상력에서 완전히 패배
- 방통심의위에 참여하면서 보니, 좌파세력들이 TV조선, 채널 A 등에 엄청난 모니터링으로 정상적인 방송이 불

- 가능할 정도로 고소 고발함. ⇨ 방송좌경화의 원인
- ☐ 방송언론의 좌경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방송중립성을 회복시켜야함.

1 자유경제원(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권태신) ⇨ 극도의 위기상황, 자경원 사실상 활동 중단

- ! 자유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연구, 재계의 싱크탱크로 출범.
- ! 자경원은 전경련의 매년 20억 지원으로 유지 ⇨ 전경련 해체로 지원 중단.
 - ☐ 한경련은 예년의 20% 지원, 희망퇴직 등 대규모 구조조정.
 - ☐ 자경원(1997 자유기업센터 → 자유기업원에서 출발)은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
- ! 정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재단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고, 자산은 국고로 환수. 자유경제원을 설립할 때 인가한 곳이 기획재정부. 향후가 문제임.

1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 : 이두호 공동대표)

- !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중심으로 운동 중
 - ☐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집회(6.10)
 - ㉠ 주4회 재판 고역이고 인권유린이다. ㉡ 한미동맹 파괴하는 사드 환경평가 철회
 - ㉢ 간첩잡는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는 사실상 국정원 해체다.
 - ㉣ 국가안보 와해시키는 문재인은 물러나라 ㉤ 518유공자 명단 밝혀라, 518 가산점 폐지하라
 - ☐ 대한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집회(7.22)
 - ㉠ 5월 이후 대한문 집회신고 사수해 진보집회 저지 ㉡ 생필품 비치하고 남대문서 민원실 점거 중.
 - ㉢ 오토 워비어 추모 집회(7.1)

1 대한 애국당 창준위(변희재, 정미홍, 조원진, 허평환 등 참여) ⇨ 새누리당에서 분리

-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중심 의제 ⇨ 조원진 의원과 허평환 前기무사령관이 공동대표.
 -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및 1000만 국민서명 운동'(마로니에 공원) 주관
 - 강남우파시민연대, 경제애국당, 구국전사들, 국민감시단, 근혜정신추앙모, 대구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보수협의회, 대한민국애국연합, 대한애국당 창준위, 무궁화애국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보수대연합, 실크로드ceo포럼, 애국발전소, 여성대통령박근혜지지모임, 자유대한호국단,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종북감시단, 탈북동포강제복송반대모임, 통일한국비전21, 평창뿔발포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등 20여 곳 참가
 - ㉠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탄핵무효와 탄핵세력 척결을 외쳐온 조원진 의원 지지자들이 주축.
- ! 전국 순회 태극기집회와 국회 세미나, 비전 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 !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과도 함께하겠다면서, 동참 호소.

1 중요안보연합(박호순 회장) ⇨ 예비역 기무사 모임

- !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 ☐ 사드 집회(애국보수)는 분열 없이 통합해야 함. 사드 집회가 강화되면 좌파도 위축될 수밖에 없음
- ! 향후 방향
 - ☐ 태극기 집회가 약화되고 있어 우려됨 ⇨ 재정비 필요 및 애국세력들의 통합이 필요.

1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정성희 회장)

- !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 ☐ 온라인 방향으로도 홍보를 강화하자. ☐ 언론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가짜정보로 차세대가 성장하고 있음.
- ! 향후 방향

☐ 보다 확고한 <미디어 대책>의 수립. ☐ 좌파의 투쟁에서 배우고 이에 대항하는 차세대 양성 준비.

🔥 자변 -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김기수 회장)

ⓘ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 환경영향 평가는 민변의 아이디어인 듯. 민변은 세월호에 수사권을 주자는 식의 논리를 가짐.

☐ 법을 철저히 악용한 사례. 특검이라는 괴물을 만들기도 했음. ☐ **환경영향평가의 허구성을 검증 및 발표.**

ⓘ 향후 방향

☐ 태극기 집회로 많은 애국인사가 구속됨(차량파괴, 기자폭행 등)

2주 진단 정도로 1년 실형을 구형 ☞ 언론의 철저한 무관심.

☐ 법조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

㉔ 사법연수원 자체가 좌경화된 상태. 학생자치회가 이미 좌경화되어있음. ☞ 2000년대 이후가 더 심함.

워크샵하면서 3000여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입회원서를 주기도 함.

🔥 자유통일유권자본부(자유본, <http://www.ubon.kr>, 뱁모 박성현)

ⓘ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가장 먼저 주장한 단체 중 하나.

ⓘ "무죄석방 운동이 이제 다시 부활하고 있는 태극기 물결 에너지의 '깃발'이 될 것"

🔥 국민감시단

ⓘ '박사모'가 <국민감시단>을 구성, 박근혜 대통령 돕기에 나섬(2016.11.6.)

ⓘ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5.18 유공자 가산점 폐지'를 촉구하는 텐트를 치고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

ⓘ 여의도 직장인들은 종건싫건 매일 국민감시단의 탄핵무효, 국회해산, 5.18가산점 폐지 등의 구호를 눈으로 읽을 수 밖에 없음.

✳️ 보수단체의 통합 움직임 : 구국포럼 결성(7/10) ☞ 7.26 제1회 포럼 시작 **올림픽파크텔**

ⓘ **쫄쫄구국동지회, 애국단체 총연합회(애총),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국본) 등이 주축**

상임대표 김세환 前구국동지연합회장 겸 육사총구국동지회장 선출

준비위 이윤하(육사총구국동지회)

ⓘ 구국포럼 주요 참여단체

애총, 육사총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3사구국동지회, 해병구국동지회, 단기사관구국동지회, 국간사 구국동지회, 공군학사구국동지회, ROTC구국동지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 모임, 고려대학교 구국동지회, 서북청년단, 신체장애인 협회, 애국청년포럼, 여의도 포럼 정신역사바로세우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정방송돌격대, 자유청년대한포럼, 자유민주 애국연합, 행주치마의병대, 사기대선 진상규명운동본부, 사회안전예방본부, 시스템클럽, 자유수호연대, 대한불교총연합회, 국혼운동본부, 엄마부대 태극기 운동본부, 프리덤 칼리지, 천년생각, SNS TV, 구국채널, 뉴스타운, 민심방송, 참깨방송, 프리덤 뉴스, SNS위원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개발위원회

ⓘ 구국포럼 창립 취지(창립취지문의 내용임)

☐ 중북 좌파정권이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심하게 훼손

☐ 육·해·공사관학교 및 해병대, 국간사, 삼사관학교, 단간사관, ROTC, 공군학사, 기술행정

사관동지회와 많은 애국시민이 모여 “구국포럼” 창립총회(7.10)

- ☐ 헌법 위에 민중이라는 떼거리문화의 좀비들이 정치와 헌법을 중단,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강제로 파면시켜 감옥에 가둬놓고 인민재판 중.**
- ☞ 범죄증거를 찾지 못하니 그 딸에게 강요하여 모친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라며 재판하는 법관들 ☞ 김일성·김정일이 지배하던 북한식.
- ☞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몽쳐야 합니다. 구국포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 구국포럼은 애국활동의 구심체가 되고 전국적으로 조직화해서 자발적인 애국시민 활동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로 다양화되고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것.
- ☞ 광복절에는 우파 애국세력이 통합 행사 진행, 전시작전권 전환도 강력 저지.



주요 애국단체와의 연계에 대한 실행 계획

연구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이데올로기 연구팀 각 단계별, 전략 전술 연구 수행 체제수호 전문가 그룹 연계 연구
교육	對진지전 대응팀 양성 프로그램 시행 對안보투쟁 부문 연구성과 의원들에게 전달 對보수 고위 정치인 그룹 교육 강화
실행	범보수 체제수호연대 결성 ☞ 사안별로 대정부 투쟁강화 범보수 진영 지식인 결집 ☞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장악 대진지전 수행을 위한 시민단체 연계전략 ☞ 실질적 투쟁력 강화



자유한국당

범보수시민단체

범보수지식인 연합

한미동맹 수호
범국민연합

메모
